
대구 지방의회의원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및 확대방안

연구책임자 : 이지인 (대구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경숙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정영태 (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이지인 · 이경숙 · 정영태 (2020). 대구 지방의회의원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및 확대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구광역시 출연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역여성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이 모이고 나누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대구여성가족정책의 Think-tank입니다.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양성평등한 지역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가족정책 확대가 필요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역민의 관심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활동이 이루어져야 됨
-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의 일환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여성의원의 양적인 증대 차원을 넘어 남녀의원 모두 성인지적 의정활동으로 확대되도록 변화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 평등한 의회 조직문화 조성이나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대한 논의가 지역에서도 이루어져야함
-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들이 여성가족의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성 주류화 실천가능성은 높일 수 있음. 그래서 지방의회의원이 여성가족의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대구 지방의회의원의 여성가족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고 정치 분야에서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범위
 - 연구를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구 시의회와 8개구군(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하였음
 - 시간적 범위는 제8대 대구 지방의회 전반기 원구성 기간인 2018년 6월~2020년 6월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연구내용

- 대구 지방의회의원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 역할과 성인지적 의회에 대하여 고찰하였음. 이를 토대로 대구 지방의회의원 구성 및 여성 참여 현황, 지방의회의원이 여성가족정책 중 어떤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인지적 의정활동 경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경험, 성인지적 의정활동 필요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연구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주요기능과 역할(법제도적 기반, 지방의회 구성 및 운영, 지방의회 지위), 여성가족정책, 성인지적 의회 등에 대해서 검토함
- 대구 지방의회(광역, 기초) 현황 등 통계자료를 분석함. 제8대 전반기 원구성 기간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 여성가족관련 이슈를 어느 정도 다루었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언급량 분석, 언급된 키워드들 간의 연관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음
- 대구 지방의회의원 146명(광역 30명, 기초 1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연구의 방향 설정과 설문조사 설계, 분석키워드 선정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음

3. 선행연구 검토

- 지방의회의원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와 관련된 기존연구는 정치·공공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와 관련하여 성별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치 분야에서 여성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가 다수였음
 - 연구대상이 국회의원(박숙자·김혜숙, 1999; 차인순, 2008; 김원홍·김복태, 2013; 임혜경·강신혜, 2018) 혹은 지방의회(이혜숙, 2014; 임혜경, 2018) 수준으로 구분되었음

II. 지방의회와 여성가족의제 고찰

1.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 2018.12.24., 타법개정)」을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등 의결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여성, 성 주류화 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하여 조례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개정 혹은 폐지하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지며 의장단,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되며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선출되며 임기는 2년임
 - 위원회는 본회의에서의 의안 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임.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고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음
-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됨
- 지방의회는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도록 선출되어 지역민을 대면하고 지역현안을 파악하여 의회 또는 지방정부에 투입하기 위해 노력함

-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의를 지방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행정기관이 의도대로 집행했는지, 재량권의 남용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재정적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감독함
-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조례안 제정, 개정·폐지의 권한을 가지게 되고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치규범으로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집행감시기관으로서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집행기관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하는 것을 살피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함

2. 여성가족의제와 성인지적 의회

-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들이 여성가족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양성평등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일임
- 여성가족의제는 여성정책, 가족정책 등으로 정책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정책이 되거나 양성평등정책으로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정책이 될 수 있음. 여성가족의제는 주민들의 삶의 전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접적인 관심이 요청됨
- 여성가족의제는 주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인구, 가구, 가족구조, 여성 일자리, 일·가정양립, 성불평등 구조, 폭력 및 안전, 돌봄 등과 관련 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 성인지 관점(Gender-sensitive)에서 양성평등은 실천성을 강조한 성 주류화 전략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은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1997년 결의안(Agreed conclusion 1997/2)에 따르면, 성인지 관점(Gender-sensitive)에서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입법, 정책, 사업 등 모든 수준과 영역의 계획 활동에서 여성과 남성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과정임

-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은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8년 의회 성인지적 의정활동 연구조사를 실시함
- 연구를 통해 성인지적 의회 운영을 위해서 여성참여, 관심의제 및 의정활동, 의회조직 및 제도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 IPU는 성인지적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여성참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의정활동, 성인지적 인식 제고를 통한 의회제도 및 문화 조성 등 활동계획을 제시함

III. 대구 지방의회 현황 및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분석

1. 대구 지방의회 구성 및 여성참여 현황

- 대구 시의회는 30명 의원(지역27, 비례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남성의원 비율이 높고 연령층이 높았음
 - 성별로 여성의원 비율은 23.3%(총7명, 지역구 5명, 비례 2명), 남성의원 비율은 76.7%(총 24명, 지역구 22명, 비례 1명)로 나타남
 - 연령별로 50세 이상~60세미만 45.7%(53명), 40세이상~50세미만 26.7%(31명), 60세 이상~70세미만 17.2%(20명)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의원들의 소속정당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임
 - 의원 선수별(재선, 3선, 4선)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선의원이 86.7%(26명)로 대부분이었으며 초선의원 중 여성은 19.2%(5명)를 차지함
- 대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는 6개로 여성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를 제외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성이 의장을 역임하였음
- 대구시 8개 구군 기초의회는 남성의원 비율이 여성의원비율보다 높고 주로 4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연령대에 다수 분포되어 있음
 - 성별로 기초의회 의원 여성비율은 31.0%(36명, 지역구 23명, 비례 13명), 남성 비율은 69.0%(80명, 지역구의원 79명, 비례 1명)

- 연령별로 50세이상~60세미만 45.7%(53명), 40세이상~50세미만 26.7%(31명), 60세이상~70세미만 17.2%(20명)순으로 나타남
- 기초의회 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소속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진보적인 성향 정당소속의원 비율과 9%p내외로 차이를 보였음
- 기초의회 의원 선수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선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의원 비율이 높았음
 - 성별로 초선의원, 재선의원 모두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높고 초선의원에서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8개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원 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평균적으로 4개정도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의원 수가 적은 서구, 중구, 남구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 달서군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었음
- 기초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원은 구군별로 차이가 나타남
 - 의장단에 여성의원 현황을 보면, 동구의회, 서구의회, 남구의회, 중구의회, 수성구 의회, 달서구의회였으며 여성의원이 의장으로 활동했던 의회는 서구의회임
 - 여성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는 주로 행정·운영 분야인데 이는 대부분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2.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분야 조례 제·개정 현황

- 대구 지방의회 제8대 전반기 원 구성 기간 동안(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여성가족분야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일생 활균형기반 조성 정책영역과 관련되는 제·개정이 많았고 대표 발의자는 여성의원이 다수였음

○ 광역의회에서 여성가족정책 영역별로 제·개정된 조례는 일생활균형 기반 조성 관련 6개, 건강과 복지증진 관련 3개, 평등하게 일할권리와 기회보장 관련 1개,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관련 3개임

○ 기초의회에서 대부분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한 부모 가족지원 조례」 발의도 많았음. 기초의회에서도 여성가족의제 관련 조례들은 대부분 여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이 많았지만 광역의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성의원들의 대표 발의도 다수 나타남

3.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분석

○ 여성가족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광역의회, 중구의회, 수성구의회, 서구의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의회 1,984건(22.7%), 중구의회 1,705건(19.5%), 동구의회 451건(5.2%), 서구의회 1,488건(17.0%), 남구의회 492건(5.6%), 북구의회 598건(6.8%), 수성구의회 1,614건(18.5%), 달서구의회 162건(1.9%), 달성군의회 250건(2.9%)임

○ 대구 지방의회는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돌봄, 보육, 저출산)’ 영역과 관련된 여성가족의제에 관심이 높음
 - 관련 키워드 언급량과 관련하여 영역별로 전체 언급량의 개수를 살펴보면 전체 8,744건의 언급횟수 중에서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일가정 양립확산’이 6,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1,034건, ‘양성평등문화 확산’ 703건, ‘건강과 복지증진 565건 임

○ 광역의회에서 관심이 많은 여성가족의제는 돌봄/보육, 저출산,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 영역임
 - 보육, 돌봄, 저출산 관련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남

<대구 광역의회 여성가족의제 영역별 상위 키워드>

영역		세부영역	구체적 내용 (50개 이상 및 다수 키워드)
전체	1,984개 (100%)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일가정양립확산)	1,171개 (59.0%)	돌봄/보육(727개)	보육(198개), 돌봄(297개), 어린이집(11개), 보육료(58개), 보육교사(39개), 양육수당(13개), 보육시설(7개), 자녀양육비(17개), 민간어린이집(16개), 출산보육(19개)
		저출산(265개)	저출산(222개), 저출산고령화(34개)
		일가정양립(179개)	육아휴직(84개), 맞벌이(18개), 일가정양립(52개), 일가정양립지원센터(8)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342개 (17.2%)	성/가정폭력(282개)	아동학대(73개), 성폭력(25개), 아동보호(79개), 가정폭력(20개), 성희롱(24개), 폭력예방교육(11개)
		안전한 사회환경(57개)	성범죄(21개), 여성폭력(38개), *불법촬영(12개)
		성매매피해(3개)	성매매피해(3개)
양성평등 문화확산	282개 (14.2%)	양성평등(282개)	양성평등(268개), *스쿨미투(9개)
건강과 복지증진	127개 (6.4%)	이주민/이주여성(110개)	다문화가족(30개), 이주여성(25개), 다문화가정(34개)
		한부모가정(17개)	한부모가정(5개), 한부모가족(12개)
		장애여성(0개)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41개 (2.0%)	여성취업/일자리(41개)	여성일자리(13개), 경제활동참가율(11개)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21개 (1.0%)	성별영향평가(4개)	특정성별영향평가(2개), 성별영향평가(2개)
		성인지 교육(10개)	성인지 교육(8개)
		성인지 예산(7개)	성인지 예산(7개)

주*: 광역의회에서 나타난 상위 검색 키워드(기초의회와 순위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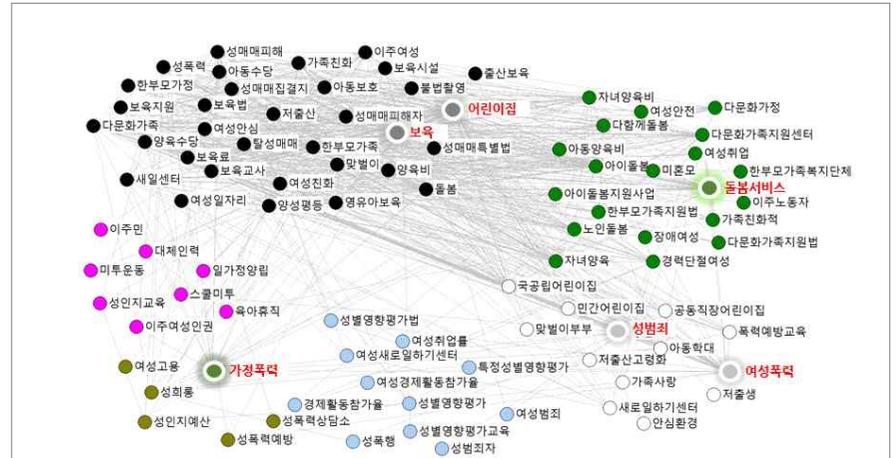
○ 기초의회에서 관심이 많은 여성가족의제는 돌봄·보육, 저출산,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 영역임
 - 보육, 돌봄 이슈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양육수당, 보육 시설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으며 저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남
 - 광역의회와 달리 가족사랑, 여성친화, 탈성매매, 탈북민, 미혼모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 대한 이슈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군 의회별로 중구는 양성평등, 동구와 달서구는 이주민/이주여성, 서구는 저출산, 남구와 수성구는 성/가정폭력, 북구는 저출산 이슈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구 기초의회 여성가족의제 영역별 상위 키워드>

영역	전체	세부영역	구체적 내용 (50개 이상 및 다수 키워드)
전체	6,788개 (100%)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일가정양립 확산)	5,147개 (75.8%)	돌봄/보육(4,284개)	보육(1,476), 돌봄(1,056개), 어린이집(328개), 보육료(264개), 보육교사(203개), *양육수당(182개), 보육시설(152개), *국공립어린이집(118개), 다함께돌봄(96개), *양육비(88개), *영유아보육(81개), *보육비(76개)
		저출산(480개)	저출산(445개), 저출산고령화(24개), *마더박스(10개)
		일가정양립(383개)	육아휴직(254개), 맞벌이(94개), *가족사랑(13개)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720개 (10.6%)	성/가정폭력(497개)	아동학대(112개), 성폭력(135개), 아동보호(47개), 가정폭력(100개), 성희롱(53개), 여성폭력(23개)
		안전한 사회환경(107개)	성범죄(77개), *여성안전(11개)
		성매매피해(88개)	*달성매매(45개), *성매매피해자(28개)
양성평등 문화확산	421개 (6.2%)	양성평등(421개)	양성평등(377개), *여성친화(42개)
건강과 복지증진	438개 (6.5%)	이주민/이주여성(319개)	다문화가족(66개), 이주민(88개), 이주여성(58개), 다문화가정(2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8개), *달북민(25개)
		한부모가정(108개)	한부모가정(38개), *미혼모부(37개), *한부모가족지원법(17개)
		장애여성(11개)	여성장애인(3개), 여성장애인노인(2개), 중소 여성장애인(4개), 청년여성장애인(2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37개 (0.5%)	여성취업/일자리(3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13개), *경력단절여성(9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25개 (0.4%)	성별영향평가(7개)	성별영향평가(3개), 특정성별영향평가(1개), 성별영향평가법(3개)
		성인지 교육(13개)	성인지 교육(13개)
		성인지 예산(5개)	성인지 예산(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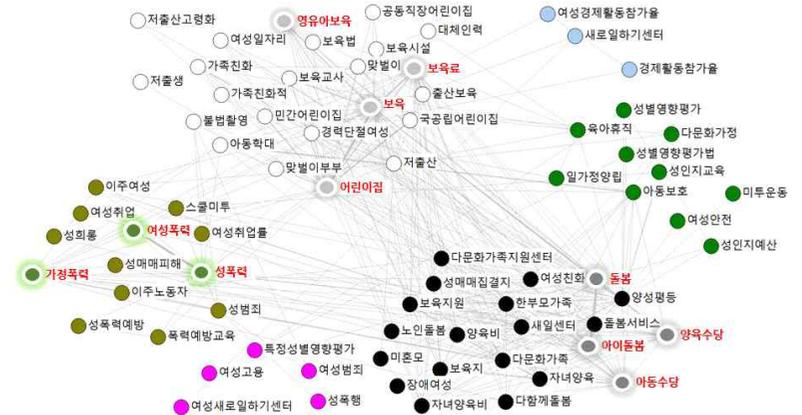
주*: 기초의회에서 나타난 상위 검색 키워드(광역의회와 순위 다름)

- 대구 지방의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여성가족관련 이슈는 ‘돌봄/보육’ 과 ‘안전한 사회환경’ 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보육, 돌봄서비스, 가정폭력, 성범죄, 여성폭력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동시에 출현되고 있음
- 대구 지방의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영역 중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영역과 ‘건강과 복지증진’ 정책영역 간의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나타남
 - 안전한 사회환경, 성/가정폭력 등 키워드와 이주민/이주여성, 한 부모 가정 이슈 키워드 간의 연결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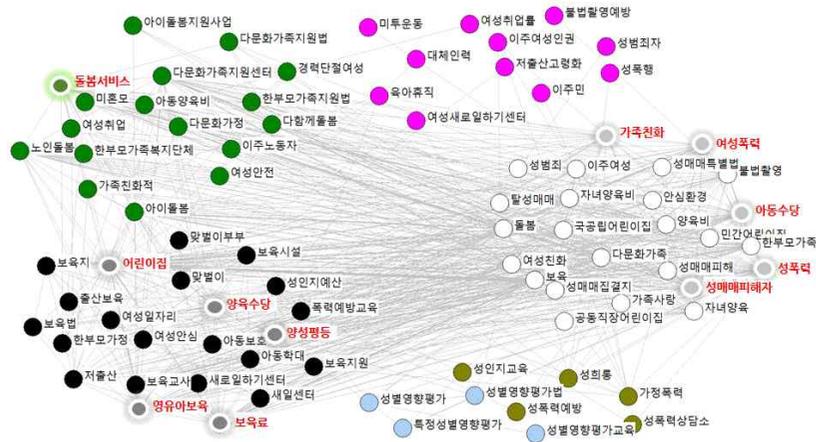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 광역의회가 관심을 가지는 여성가족관련 이슈는 돌봄/보육과 일가정 양립 이슈로 나타남
 - 보육, 보육료,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돌봄, 양육수당, 아이돌봄, 아동수당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동시에 출현되고 있음
 - 돌봄/보육과 일가정양립 이슈 키워드들은 강한 연결을 보이고 있음. 그 외 ‘안전한 사회환경’ 과 ‘성인지 교육’ 이슈가 일정부분 나타났으나 연결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광역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 기초의회가 관심을 가지는 여성가족관련 이슈는 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와 양성평등 이슈로 나타남
 - 여성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어린이집,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돌봄서비스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동시에 출현되고 있음
- 기초의회에서는 폭력근절과 인권보호(성/가정폭력 및 성매매피해 이슈)와 양성평등문화 확산(양성평등 이슈) 정책영역 간의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나타남
 - ‘이주민/이주여성’, ‘한부모 가정’ 등 이슈들은 돌봄보육, 저출산 등 이슈들과도 공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여성 취업/일자리’ 나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등의 이슈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남



[기초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IV.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제고 및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설문조사는 제8대 대구 지방의회의원 146명(광역의원 30명, 기초의원 11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 하여 온라인조사로 진행하였음
- 설문 문항은 김경희 외(2011), 김원홍 외(2013)연구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여성가족의제 관련 의정활동 경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참여 정도, 성인지 감수성 정도, 성인지적 의정활동 필요성 등임.
- 조사기간은 2020. 9.2~9.15(총15일)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유효응답은 총 105부이며 자료는 통계프로그램(SPSS VER.20.0 for Windows)으로 처리하였음

2. 조사결과

1) 여성가족정책 의정활동 경험

- 일가족양립정책, 여성의 대표성확대, 여성사회참여 활동, 성별영향평가 등 여성가족의제는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짐
 - 여성가족의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는 응답은 상임위원회 69.5%, 특별위원회 37.1%, 의원연구단체 43.8%, 기타(간담회, 연수활동 등) 40.0%임
- 의원 중 다수가 양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보았으며 관련된 활동 경험은 성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음
 - 의정활동을 하면서 양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해서 활동한 경험은 있다는 63.8%였으며 성별로 여성 66.7%, 남성 67.2%
- 양성평등인식 증진을 위한 가장 많은 활동유형은 ‘의원대상 성인지 워크숍 실시·참석’ 임

- 의원들의 양성평등 인식 증진 활동 유형은 ‘의원대상 성인지 워크숍 실시·참석’ 61.2%, ‘양성평등정책예산 편성·증액요구’ 38.8%, ‘각 위원회 구성 시 여성참여할당 제안 및 요구’ 37.3%, ‘성별통계·양성평등관련 의정질의’ 22.4%, ‘양성평등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및 참여’ 20.9%

2)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참여경험 및 참여욕구

- 최근 3년간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 참여경험은 1회에 가장 많이 응답
 - 최근 3년간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여 경험에 대해 ‘없다’ 24.8%, ‘1회’ 29.5%, ‘2회’ 23.8%, ‘3회’ 11.4%, ‘4회 이상’ 10.5%
-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주로 ‘의회’ 주관 교육워크숍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주관 기관은 ‘의회’ 65.8%, ‘여성·시민단체’ 25.3%, ‘정부·산하기관 및 정당’ 16.5%, ‘기타’ 3.8%
 -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이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 94.9%, ‘도움이 되지 않았다’ 3.8%
- 의원들은 의회 주관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에 관한 교육·워크숍을 개최할 경우 참여 의사가 높았음
 - 참여의사에 대해 ‘있다’ 85.7%였으며 성별로 여성 93.9%, 남성 56.9%

3) 성인지적 의정활동 필요성 인식 및 정책요구

-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일과 성역할 분리 인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였음
 - 가정과 성역할 분리 인식 37.3점, 성역할위계 인식 26.0점, 일과 성역할 분리 인식 46.8점
- 가정과 성역할 분리 인식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큰 것으로 보여짐
 -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34.3점,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39.1점,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35.6점,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34.0점,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 시 해야 한다’ 43.6점

- 성역할 위계 인식에서는 남성성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큰 것으로 보여짐
 - 각 항목에 대해서 평균점수(100점 환산기준)는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19.1점, ‘남녀(이성)관계에서 테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25.9점,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32.7점,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26.9점,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25.2점
- 일과 성역할 분리 인식에서는 남성의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여짐
 - 각 항목에 대해서 평균점수(100점 환산기준)는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59.1점,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64.7점,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16.5점
- 의원들은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의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의식’이라고 생각함
 - 각 항목에 대해서 평균점수(100점 환산기준)는 ‘의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의식’ 56.7점, ‘의회 운영에 관한 양성평등한 법/제도’ 49.7점, ‘여성의원들의 지지’ 49.0점, ‘지역구 주민의지지’ 47.7점, ‘소속 정당 의지지’ 46.7점, ‘시민 단체나 이익집단의지지’ 46.7점
- 의원들은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회의 법/제도의 성인지적 의정활동’이며 다음으로 ‘의원 대상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이라고 생각함
 - 각 항목에 대해서 평균점수(100점 환산기준)는 ‘의회의 법/제도의 성인지적 의정활동’ 74.7점, ‘의원 대상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74.1점, ‘지역여성가족단체와의 네트워크강화’ 71.8점, ‘의회 직원대상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71.4점, ‘양성평등을 위한 의정 모니터링단 운영’ 67.7점

V. 결론 및 정책방안

1. 연구결과 논의

- 대구 지방의회에 여성참여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정책영역에 관심도가 많았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전가능성이 있었지만 의원들이 여성가족의제 노출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참여 기회를 확대가 필요함
- 지방의회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 역점 사업과제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 지방정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해됨. 지방정부에서 미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여성가족의제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여성가족정책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에서 전문성이 있는 활동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교육·워크숍 외에 다양한 형태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과 성인지 예산편성/증액 요구 등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 대구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과 성역할 분리’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정관념이 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대구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는 특정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나타나 제한적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여성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2. 정책방안

- 성인지 관점의 여성가족정책 의원 연구단체 활동 추진
 - 지방의회는 성인지 관점의 여성가족정책 의원 연구단체 결성하고 전문가와 함께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조례 개정 사례 검토, 정책영역별 관련 조례

분석 및 1인 1조례 제·개정안 발표, 여성가족정책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등 추진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지방의회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확대
 - 의회가 주도적으로 의무사항인 4대 폭력예방교육 외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확대하도록 함
 - 성인지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운영조례에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명문화 하는 방안 고려
 - 의정활동 정책영역별로, 의회조직 등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내용 및 강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성정책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도를 높임
 - 정기적인 의원대상 역량강화교육이나 워크숍 외에 연찬회, 조찬회 등의 모임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성인지 관점의 정책사례 등을 소개하는 교육 등으로 의원들에게 관심도 제고
-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를 통한 여성가족의제 발굴 및 정책연계 강화
 - 다양한 주체들이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gender governance)’ 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여성가족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연계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향상
 -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정책요구를 듣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설명회, 포럼 및 세미나 등 참여 과정 후 조례 발의 및 제정 등을 통한 정책과제를 실행하도록 함
- 여성가족정책 관련 소관위원회 주최 세미나 및 소모임 개최
 - 지방의회의 여성가족정책 관련 소관위원회 주최로 좌담회 형식의 세미나 혹은 소모임 개최를 통해 시민들과 성 평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확대
 - 구체적으로 성 평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청년단체,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그룹별 좌담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에서 지방의회와 연대를 통한 여성가족관련 공동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II. 지방의회와 여성가족의제 고찰	9
1.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11
2. 여성가족의제와 성인지적 의회	14
3. 소결	19
III. 대구 지방의회 현황 및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분석	21
1. 대구 지방의회 구성 및 여성참여 현황	23
2.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분야 조례 제·개정 현황	32
3.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분석	35
4. 소결	49
IV.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제고 및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51
1. 조사개요	53
2. 조사결과	54
3. 소결	73
V. 결론 및 정책방안	75
1. 연구결과 논의	77
2. 정책방안	79
■ 참고문헌	83
■ 부록	85

표 목 차

〈표 II-1〉 여성가족의제 범위와 내용	15
〈표 II-2〉 IPU 조사 분석틀	17
〈표 II-3〉 IPU 성인지적 의회를 위한 활동계획	18
〈표 III-1〉 대구 광역의회 의원 성별·연령별 현황	23
〈표 III-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정당별 현황	24
〈표 III-3〉 대구 광역의회 의원 선수별 현황	24
〈표 III-4〉 대구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현황	25
〈표 III-5〉 대구 광역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현황	25
〈표 III-6〉 대구 기초의회 의원 성별·연령별 현황	26
〈표 III-7〉 대구 기초의회 의원 정당별 현황	26
〈표 III-8〉 대구 기초의원 성별·선수별 현황	27
〈표 III-9〉 대구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28
〈표 III-10〉 대구 기초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여성현황	28
〈표 III-11〉 대구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29
〈표 III-12〉 대구 동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29
〈표 III-13〉 대구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29
〈표 III-14〉 대구 남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30
〈표 III-15〉 대구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30
〈표 III-16〉 대구 수성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30
〈표 III-17〉 대구 달서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31
〈표 III-18〉 대구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현황	31
〈표 III-19〉 광역의회 여성가족분야 조례 제·개정 현황	32

〈표 III-20〉 기초의회 여성가족분야 조례 제·개정 현황	33
〈표 III-21〉 의회별 문서 생성량	35
〈표 III-22〉 여성가족의제 영역별 검색키워드	36
〈표 III-23〉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의제 영역별 상위 키워드	38
〈표 III-24〉 대구 광역의회 여성가족의제 영역별 상위 키워드	40
〈표 III-25〉 대구 기초의회 여성가족의제 영역별 상위 키워드	41
〈표 III-26〉 기초의회별 여성가족의제 세부영역 키워드	43
〈표 IV-1〉 문항구성 내용	53
〈표 IV-2〉 응답자 특성	54
〈표 IV-3〉 소속위원회별 여성가족관련 의제 다루는 정도	55
〈표 IV-4〉 응답자 특성별 상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관련 의제 다루는 정도	56
〈표 IV-5〉 응답자 특성별 양성평등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경험	57
〈표 IV-6〉 응답자 특성별 양성평등 인식 증진 활동 유형	58
〈표 IV-7〉 응답자 특성별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관련 교육·워크숍 참여 경험	60
〈표 IV-8〉 응답자 특성별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참여 주관 기관	61
〈표 IV-9〉 응답자 특성별 교육/ 워크숍 성평등 의정활동 도움 정도	62
〈표 IV-10〉 응답자 특성별 의회주관 교육/워크숍 참여의사	64
〈표 IV-11〉 항목별 성인지 감수성 정도	65
〈표 IV-12〉 가정과 성역할 분리 인식	65
〈표 IV-13〉 응답자특성별 가정과 성역할 분리인식	66
〈표 IV-14〉 성역할 위계 인식	67

<표 IV-15> 응답자 특성별 성역할 위계 인식 67
 <표 IV-16> 일과 성역할 분리인식 68
 <표 IV-17> 응답자 특성별 일과 성역할 분리인식 69
 <표 IV-18>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70
 <표 IV-19> 응답자 특성별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71
 <표 IV-20> 성인지적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72
 <표 IV-21> 응답자 특성별 성인지적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73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수행 절차 5
 [그림 III-1]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 44
 [그림 III-2] 광역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44
 [그림 III-3] 기초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45
 [그림 III-4] 중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45
 [그림 III-5] 동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46
 [그림 III-6] 서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46
 [그림 III-7] 동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47
 [그림 III-8] 북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47
 [그림 III-9] 수성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48
 [그림 III-10] 달서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48
 [그림 III-11] 달성군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49
 [그림 IV-1] 양성평등인식 증진 활동 여부 56
 [그림 IV-2] 양성평등 인식 증진 활동 유형 58
 [그림 IV-3]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참여 경험 59
 [그림 IV-4]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참여 주관 기관 61
 [그림 IV-5] 교육/ 워크숍 성 평등 의정활동 도움 정도 62
 [그림 IV-6] 의회 주관 교육/ 워크숍 참여 의사 6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양성평등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가족)정책에 지역민의 관심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활동이 필요하다.

여성(가족)정책은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보건, 복지, 경제, 건강, 교통 등 다뤄질 수 있는 여성가족의제가 다양하다. 여성정책은 양성평등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 할 권리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복지 증진 등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주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의제가 논의되고 있다. 여성가족의제가 여성(가족)정책이 되고 정책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가족)정책이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남녀평등 실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성가족의제 관심은 성 평등한 의회 조직문화 조성이나 의정활동에 성인지 관점 적용 등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여성의원의 양적 증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의원 확대를 넘어서 남녀의원 모두 성인지적 의정활동이 밑바탕이 된다면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이해와 여성가족정책 관련 의정활동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성인지 관점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가족의제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성가족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고 지방의회의 성 주류화 확산을 통한 지역 양성평등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지적 의정활동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대구 지방의회의원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제고 통해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 방안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의회와 8개구군(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제8대 대구 지방의회 전반기 원구성 기간인 2018년 6월~ 2020년 6월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 연구의 내용

대구 지방의회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인지적 의회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대구 지방의회의원 구성 및 여성참여 현황, 지방의회의원들이 여성가족정책 중 주로 어떤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인지 의정활동 경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경험, 성인지적 의정활동 필요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문헌연구 및 현황분석, 회의록 내용분석, 지방의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주요기능과 역할(법제도적 기반, 지방의회 구성 및 운영, 지방의회 지위), 여성가족의제, 성인지적 의회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둘째, 대구 지방의회(광역, 기초)의 위원현황 등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제8대 전반기 원구성 기간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 여성가족관련 이슈를

어느 정도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언급량을 분석하였으며 언급된 키워드들 간의 연관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셋째, 대구 지방의회의원 146명(광역 30명, 기초 1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소속의회의 여성가족의제 다루는 빈도, 양성평등 인식 증진 활동 경험 및 활동유형,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참여경험 및 확대 요구도, 성역할 고정관념,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성인지적 의정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방향 설정과 설문조사 설계, 분석키워드 선정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다.



[그림 I -1] 연구수행 절차

3. 선행연구 검토

지방의회의원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와 관련된 기존연구는 많지가 않았다. 다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정치·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와 관련하여 성별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다만 연구대상이 국회의원(박숙자·김혜숙,

1999; 차인순, 2008; 김원홍·김복태, 2013; 임혜경·강신혜, 2018) 혹은 지방의회(이혜숙, 2014; 임혜경, 2018)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를 연구를 한 박숙자·김혜숙(1999)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있는 의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기여도가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서 여성의 정치세력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남녀 국회의원들의 국회활동을 회의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진보적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의원들이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여성의원 뿐만 아니라 남성의원에게 대한 계몽과 홍보작업은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차인순(2008)은 ‘성인지적 의회’라는 개념을 통하여 17대 국회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살펴보고 18대 국회가 성인지적 의회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성평등입법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비전과 계획 수립, 성평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의회의 기본 조직으로 인식, 성인지적 의정지원 체계화를 위한 성인지 교육, 입법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분석에 관한 의정지원 서비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김원홍·김복태(2013)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양성평등적 국회조직 및 성인지 정책 생산력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상임위 여성위원장 및 여성간사 확대, 국회의원 여성보좌진 적극적 활용 권고, 국회의원 대상 여성정책관련 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 여성정책 연찬회를 통한 의정활동 성인지성 확산, 성 주류화 연구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의정활동지원 방안을 연구한 이혜숙(2014)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의원의 의정활동과 성 평등 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의원의 역량강화 방안 및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의 주된 관심 영역은 ‘사회복지 실현’, ‘여성의 권익증진’이며 역량강화 및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선, 사회문화적 의식변화, 정당의 지원, 여성단체의 지원,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활성화 중요성 등에 대해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임혜경(2018)은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여성의원의 역할을

조명하고, 여성의 실질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여성리더 발굴과 의정활동의 성 주류화 실천, 의회 운영의 남녀동수 원칙과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 조성,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의원 연수 제도 및 정책 지원, 성인지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젠더 거버넌스 강화, 여성 및 성인지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하였다.

II. 지방의회와 여성가족의제 고찰

- | | |
|--------------------|----|
| 1.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 11 |
| 2. 여성가족의제와 성인지적 의회 | 14 |
| 3. 소결 | 19 |

1.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가. 법·제도적 기반

의회는 여러 가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설립 운영은 「국회법」에 기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성 주류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기반인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 2018.12.24., 타법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의회 권한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등 의결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서류 제출 요구권,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권한이 부여받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도 여성, 성 주류화 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개정, 폐지하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는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우선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도록 선출되어 지역민을 대면하고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의회 또는 지방정부에 투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의를 지방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행정기관이 집행할 때 지방의회의 의도는 변하지 않았는가, 재량권의 남용은 발생하지 않았나, 재정적 한도를 넘은 것은 아닌가를 감독하는 것이다(강신타, 2001; 이승기 2002:46 재인용). 지방정부의 입법은 자치법규로서 조례, 규칙 등이 해당된다.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조례안 제정, 개정·폐지의 권한을 가지며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형성의 하나의 형태이다.

집행 감시기관으로서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집행기관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 의회의 경우 14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9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행하고 있다.

다. 지방의회 구성 및 운영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며 의장단,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되며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갖는다. 또한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부의장은 의장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이며 의안심의에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고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되어진다.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을 넘겨받아 심사하고, 소관 실·국·본부의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하며, 소관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주로 지방행정기관의 부서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지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게 되어 있지만 총선거 후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필요

할 때 본회의의 의결로써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전속되지 않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해 구성되며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유지하게 된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기타특별위원회를 두어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인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써 결정되며 정례회는 연 2회 60일 이내, 임시회의 매회기는 20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총일 수는 14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정례회는 매년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80일 이내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 소집에 대해서는 집회 3일전에 공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회의시작 전에 개의 일시 및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과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이상이 입장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참석한다. 그리고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 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며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여성가족의제와 성인지적 의회

가. 여성정책과 여성가족의제 범위

여성가족의제는 여성정책의 이슈와 과제로서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성정책은 크게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이라는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들은 여성노동의 가치평가, 돌봄노동의 사회화, 출산과 모성보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직업개발, 평등고용의 정착, 여성사회참여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여성빈곤, 여성노인, 장애여성 등이 있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이라 지칭되고 있지만 남녀평등실현이라는 정책의 목표는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가지기 위해 시행해 온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조치가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출산·육아 등 자녀 양육에 관해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를 보장,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등도 포함되고 있어서 이전보다 여성관련 이슈가 더 다양화 되었다.

여성가족의제가 정책으로 구체화된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증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6개 과제(남녀평등 의식과 문화확산, 평등하게 일할권리와 기회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건강증진, 양성평등추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 구성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하였다. 한편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은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정책과제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정책이 마련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가족과, 복지과, 여성복지과 등에서 다루어진다.

<표 II-1> 여성가족의제 범위와 내용

양성평등 정책영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중과제)	세부과제 및 주요 이슈
남녀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생활속 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성평등 의식제고, 양성평등 교육
평등하게 일할권리와 기회보장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 개선, 여성의 경력육지·개발 지원	다양한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성별고용격차해소, 여성 집중 직종 근로환경 개선,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여성취·창업지원 확대 놓여준 여성의 취·창업역량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제고,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여성 관리직 공무원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수준 제고, 여성리더십 강화, 기업의 여성임원비율 확대 등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모성보호 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국공립돌봄시설 확충,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일생활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인지 건강증진 기반 강화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사이버 폭력피해 대응,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 여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여성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
건강과 복지증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청년기 여성 건강지원(취약계층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성교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안전만분만, 난임 여성 지원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추진역량 강화,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통계 내실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성인지 예산과 관련제도 연계 강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

자료: 여성가족부(2015). (제1차)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2015~2017; 여성가족부(2018). (제2차)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2018~2022 참고하여 구성

이와 같이 여성가족의제는 주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인구, 가구, 가족 구조, 여성일자리, 일·가정양립, 성불평등 구조, 폭력 및 안전, 돌봄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가족의제 중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의제는 공공정책과 정책 수단을 통해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기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법 제정을 통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하거나 기회 제공, 제약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일하는 여성이 직면한 보육의 사회화’라는 의제가 국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논의가 됨으로써 양성평등정책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김은경 외, 2017:34)는 것이다. 여성가족의제는 여성 혹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의 전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들의 직접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지방의회는 정책형성 형태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들이 여성가족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양성평등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양성평등한 지역사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꼭 다루어져야 할 여성가족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리게 되는 여성가족 관련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곤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의제의 범위와 핵심내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성인지적 의회

성인지 관점(Gender-sensitive)에서 양성평등은 실천성을 강조한 성 주류화 전략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한다.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은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경험을 반영하여 특정개념이 특정한 성(gender)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지를 판단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관찰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김진화, 2005).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적절한 역할 및 권한에 대한 태도, 자유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에 대한 태도(박옥임 외, 2005: 125)를 의미한다고 한다.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1997년 결의안(Agreed conclusion 1997/2)에 따르면, 성인지 관점(Gender-sensitive)에서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입법, 정책, 사업 등 모든 수준과 영역의 계획 활동에서 여성과 남성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주류화 활동에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처럼 직접적인 성 주류화 관련제도에 대한 지원활동 뿐 아니라 성차별적 법령의 개정이나 성 평등 촉진을 위한 법령제정,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성인지적 감사·조사, 의회 내 여성 대표성 제고 활동,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향상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김경희 외, 2011: 95).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은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8년 의회 성인지적 의정활동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회의 여성참여, 의회에서 성별차이, 의정활동에서 남녀차이, 성인지적 의회를 위한 의회제도 및 조직문화 등 중심으로 조사 분석들을 <표 II-2>와 같이 구성 하였다.

<표 II-2> IPU 조사 분석들

영역	주요내용
의회의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양적대표성 개괄 의회의 새로운 참여자인 여성에 의해 규정된 주요 변화: 정치-사회-문화적 장벽(성 역할에 관한 전통적 인식, 여성의 가정 내 책무), 제도적 요인(선거제도, 정당체계)
의회에서 남성과 여성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원과 남성 의원 간의 정책적 관심, 가치관, 우선순위의 차이: 여성의원의 정치에 대한 기여, 새로운 정치적 의제 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여성과 남성 간에 평등 이슈에 관한 남성 의원의 견해: 양성평등 이슈에 대해 여성과 남성 간의 연대 가능성 탐색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과 남성의 정책 발의에 관한 차이: 의회에서 강조된 구체적 정책 영역을 규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양성평등을 위해 공조하는 사례를 조명
제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의 필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칙과 실행, 구조의 도입을 통해 성인지적 의회로의 발전 가능성 탐색: 의회제도적 측면(기구 및 조직, 운영법률, 절차), 의사 절차 및 운영 측면(개회 및 운영시간, 상임위원회 설치)

자료: Inter-Parliamentary Union(2008); 김원홍 외(2011) 재인용

성인지적 의회를 위한 IPU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의회 진출에서 남성은 유권자의지지, 여성은 가정 내 책임을 느낄 때 의회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해 정치영역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원은 사회적 이슈를 강조하거나 여성에 관한 아젠다 형성 등에 기여해야한다는 시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셋째, 정책개발에서 여성의원들은 여성과 관련한 정책개발을 우선 시하며 정당정책이 여성관련 아젠다 형성과 우선 입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넷째, 성인지적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지원, 상임위원회 활동, 정당을 초월한 여성 국회의원들 간 회합, 의회 운영 절차 및 규칙의 변화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지적 의회 운영을 위해서 여성참여, 관심의제 및 의정활동, 의회조직 및 제도 등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IPU는 2012년 127차회를 통해 성인지적 의회를 위한 활동계획(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을 제시하였다. IPU가 제시한 성인지적 의회를 위한 활동계획의 주요 영역은 <표 II-3>와 같다. 성인지적 의회를 위한 주요영역은 앞서 IPU조사 분석들에도 제시되었듯이 여성참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의정활동, 성인지 인식제고를 통한 의회제도 및 문화영역에서 성 평등을 위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표 II-3> IPU 성인지적 의회를 위한 활동계획

<p>[Key Action Areas of the Pla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에 여성 수 증가와 참여에 평등 성취 2. 성평등한 입법과 정책 강화 3. 전반적인 의회활동에 성주류화 4. 성인지적 기반시설과 의회문화 도입 및 개선 5. 성평등이 모든 의회의원(여성과 남성)에게 공유되어지도록 책임성을 보장 6. 성평등을 지지하는 정당지지 7. 의회직원들의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강화 <p>[원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 area 1: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in parliament and achieve equality in participation - Action area 2: Strengthen gender equality legislation and policy

- Action area 3: Mainstream gender equality throughout all parliamentary work
- Action area 4: Institute or improve gender-sensitive infrastructure and parliamentary culture
- Action area 5: Ensure that responsibility for gender equality is shared by all parliamentarians - men and women
- Action area 6: Encourage political parties to be champions of gender equality
- Action area 7: Enhance the gender sensitivity of, and gender equality among, parliamentary staff

자료: www. ipu.org> 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

3. 소결

지방의회는 지방행정부의 제반 행정업무에 대해 감사, 법률안 심사, 예·결산 심의 및 의결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위임 받았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가 시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에서는 다루어져야 할 많은 이슈들이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정책이 미치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여성가족의제는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하게 사회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정책의 범주가 여성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가족의제는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성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확장된 여성가족정책은 궁극적으로 남녀평등 실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의제로부터 도출되는 정책들은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마련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성인지 관점(Gender-sensitive)이 요구되어진다.

지방의회의원들이 성인지 관점(Gender-sensitive)에서 성 주류화 관련제

도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성차별적 자치법규 개정, 성 평등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지방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성인지적 감사·조사 등 의정 활동을 한다면 더 많은 지역 현안문제 찾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인지 관점 지방정부가 성 주류화 관련제도(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협력 한다면 양성평등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Ⅲ. 대구 지방의회 현황 및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분석

1. 대구 지방의회 구성 및 여성참여 현황	23
2.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분야 조례 제·개정 현황	32
3.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분석	35
4. 소결	49

1. 대구 지방의회 구성 및 여성참여 현황

가. 광역의회

1) 의회 구성 현황

대구 광역의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실시로 30명 의원(지역27, 비례3)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의원 비율이 높고 연령층이 높았다.

성별로 여성의원 비율은 23.3%(총7명, 지역구 5명, 비례 2명), 남성의원 비율은 76.7%(총 24명, 지역구 22명, 비례 1명)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연령층은 50세이상~60세미만 43.3%, 60세이상~70세미만 40.0%, 40세이상~50세미만 1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 대구 광역의회 의원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당선 인수	성별		연령별 당선인수					
		여성	남성	30세 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70세미만	70세 이상
합계	30 (100)	7 (23.3)	23 (76.7)	0 (0.0)	0 (0.0)	5 (16.7)	13 (43.3)	12 (40.0)	0 (0.0)
지역구	27	5	22	0	0	4	12	11	0
비례	3	2	1	0	0	1	1	1	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역대선거통계 <http://info.nec.go.kr>(2018. 지방선거일 기준)

의원들의 소속정당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 소속 의원들이 많았다. 선거 당시 의원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83.3%(30명 중 25명 당선)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6.7%(30명 중 5명 당선)였다.

<표 III-2> 대구 광역의회 의원 정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합계	전체 30 (100)	5 (16.7)	25 (83.3)	-	-
지역구	여성	7 (23.3)	2 (40.0)	5 (20.0)	-	-	-
	남성	23 (76.7)	3 (60.0)	20 (80.0)	-	-	-
비례	전체	27	4	23	-	-	-
	여성	5	1	4	-	-	-
비례	남성	22	3	19	-	-	-
	전체	3	1	2	-	-	-
비례	여성	2	1	1	-	-	-
	남성	1	1	1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역대선거통계 <http://info.nec.go.kr>(2018. 지방선거 기준)

의원 선수별(재선, 3선, 4선)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선의원이 86.7%(26명)로 대부분이었으며 초선의원 중 여성은 19.2%(5명)를 차지하였다.

<표 III-3> 대구 광역의회 의원 선수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인원	선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합계	30	26	2	2	0	
성별	여성	7	5	1	1	0
	남성	23	21	1	1	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역대선거통계 <http://info.nec.go.kr>(2018. 지방선거 기준)

2) 위원회 구성

대구광역시회의 상임위원회는 6개의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민원처리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예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전반기 원구성 기준 대구시의 6개 위원회별 여성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를 제외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성의원이 1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여성의원 2명,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여성의원이 각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여성의원 참여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전반기 의장이 여성의원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4> 대구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원	36	7	6	6	6	6	5
현원	36	7	6	6	6	6	5
전반기 원구성	29	6	4	5	5	5	4
후반기 원구성	7	1	2	1	1	1	1

주: 1) 제8대 지방의회의원 원구성은 전반기(2018.7), 후반기(2020.7) 자료임

2) 운영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 중복,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소속 되지 못함

자료: 대구광역시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http://www.elis.go.kr) 참고

대구 광역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여성의원 활동을 살펴보면, 전반기에 의장이 여성의원이었으며 부의장 1명도 여성의원이었으나 후반기 원구성에서 의장단에 여성의원은 미포함 되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전반기, 후반기 각각 1명이었으며 전반기에는 문화복지위원회, 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성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표 III-5> 대구 광역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현황

(단위: 명)

구분	의장단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경제환경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교육위원장
전반기 원구성	1	1	-	-	1	-	-	-

주: 1) 제8대 지방의회의원 원구성은 전반기(2018.7), 후반기(2020.7) 자료임

자료: 대구광역시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http://www.elis.go.kr) 참고

나. 기초의회

1) 의원 구성현황

대구시 8개 구군 기초의회는 남성의원 비율이 여성의원비율보다 높고 주로 40세 이상에서 60세미만의 연령대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

성별로 기초의회 의원 여성비율은 31.0%(36명, 지역구 23명, 비례 13명), 남성 비율은 69.0%(80명, 지역구의원 79명, 비례 1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50세이상~60세미만 45.7%(53명), 40세이상~50세미만 26.7%(31명), 60세이상~70세미만 17.2%(20명)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대구 기초의회 의원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당선인수	성별		연령별 당선인수					
		여성	남성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70세미만	70세 이상
합계	116 (100)	36 (31.0)	80 (69.0)	-	11 (9.5)	31 (26.7)	53 (45.7)	20 (17.2)	1 (0.9)
지역구	102	23	79	-	9	28	46	18	1
비례	14	13	1	-	2	3	7	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역대선거통계 http://info.nec.go.kr

기초의원 정당을 보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소속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진보적인 성향 소속의원 비율과 9%p내외로 차이를 보였다.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53.4%(116명 중 62명당선)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116명 중 50명 당선), 그 외 바른미래당 2%, 정의당과 무소속 각 0.9%로 나타났다.

<표 III-7> 대구 기초의회 의원 정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합계	전체 116 (100)	50 (43.1)	62 (53.4)	2 (1.7)	-	1 (0.9)	-	1 (0.9)

	여성	36 (31.0)	16 (32.0)	20 (32.3)	-	-	-	-	-
	남성	80 (69.0)	34 (68.0)	42 (67.7)	-	-	-	-	-
지역구	전체	102	45	53	2	-	1	-	1
	여성	23	11	12	-	-	-	-	-
비례	남성	79	34	41	2	-	1	-	1
	전체	14	5	9	-	-	-	-	-
비례	여성	13	5	8	-	-	-	-	-
	남성	1	-	1	-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역대선거통계 <http://info.nec.go.kr>

기초의회 의원 선수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선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의원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 초선의원, 재선의원 모두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높고 2선 이상 의원보다 초선의원에서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구군(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전체의원 중 초선의원 71.6%, 재선 20.7%, 3선 7.7%이다. 그리고 초선의원 중 여성 32.5%, 남성 67.5%, 재선의원은 여성 29.2%, 남성 70.8%, 3선 의원 중 여성 22.2%, 남성 77.8%였다.

<표 III-8> 대구 기초의회 의원 성별·선수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인원	선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8개구군	전체	116(100)	83(71.6)	24(20.7)	9(7.7)
	여성	36(31.0)	27(32.5)	7(29.2)	2(22.2)
	남성	80(69.0)	56(67.5)	17(70.8)	7(77.8)

자료: 8개 구군 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 참고

2) 위원회 구성

대구시 8개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원 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평균적으로 4개정도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원 수가 적은 서구, 중구, 남구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

<표 III-9> 대구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상임위원회
중구	운영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동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서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남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북구	행정자치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도시보건위원회
수성구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
달서구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달성군	-

자료: 8개 구군 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 참고(특별위원회는 구군의회 상황에 따름)

기초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원은 구군별로 차이가 있었다. 전반기 의장단에 여성의원 현황을 보면, 동구의회, 서구의회, 남구의회, 중구의회, 수성구의회, 달서구의회이며 여성의원이 의장으로 활동했던 의회는 서구의회였다. 상대적으로 의원 수가 적은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이 의장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상임위원장의 여성의원 현황을 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달성군 의회를 제외하면 서구의회 이외에 6개 구군의회에서는 여성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여성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비율도 의원 수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여성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위원회 성격은 의회 행정·운영분야인데 이는 대부분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I-10> 대구 기초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여성현황

구분	전체(여성)	전반기		여성 상임위원장
		의장단		
		의장	부의장	
중구	7명(3명)	-	1명	1명(도시환경위원회)
동구	16명(7명)	-	1명	1명(운영자치행정위원회)
서구	11명(3명)	1명	-	0명
남구	8명(4명)	-	1명	2명(운영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북구	20명(5명)	-	-	0명
수성구	20명(6명)	-	-	1명(도시보건위원회)
달서구	24명(7명)	-	1명	2명(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달성군	10명(1명)	-	-	상임위원회 없음

자료: 8개 구군 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 참고

구체적으로 각 구별로 상임위원회 여성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구의회는 상임위원회 정원 10명이며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 모두 여성의원이 40~50%정도 참여하고 있었다.

<표 III-11> 대구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합계	운영행정	도시환경
상임위원회 정원		10	5	5
전반기 원구성	현원	10	5	5
	여성	5	2	3
	남성	5	3	2

자료: 대구 중구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 참고

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정원은 15명이며 운영자치행정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여성의원이 40%정도 비율도 참여하고 있었다.

<표 III-12> 대구 동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합계	운영자치행정	경제복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정원		15	5	5	5
전반기 원구성	현원	15	5	5	5
	남성	8	3	3	2
	여성	7	2	2	3

자료: 대구 동구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 참고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정원은 16명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여성의원이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 20%~40% 정도 비율 범위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표 III-13> 대구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상임위원회구분		합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사회·도시
정원		16	5	5	6
전반기	현원	15	5	5	5
	여성	2	0	1	1
	남성	13	5	4	4

자료: 대구 서구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 참고

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정원은 15명이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에 모두 여성의원이 50%정도 비율로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남성의원 참여가 없었다.

<표 III-14> 대구 남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합계	의회운영	행정자치	도시복지
상임위원회 정원		15	5	5	5
전반기	현원	11	4	4	3
	여성	6	2	1	3
	남성	5	2	3	0

자료: 대구 남구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 참고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정원은 26명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 모두 여성의원이 30~50% 비율 범위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여성의원의 참여가 없었다.

<표 III-15> 대구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합계	의회운영	행정자치	사회복지	도시보건
정원		26	7	7	6	6
전반기원 구성	현원	26	7	7	6	6
	여성	7	2	0	3	2
	남성	19	5	7	3	4

자료: 대구 북구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 참고

수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정원은 21명이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여성의원은 15~35%비율 범위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성의원 참여는 없었다.

<표 III-16> 대구 수성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합계	운영	행정자치	사회복지	도시보건
정원		21	6	5	5	5
전반기 원구성	현원	25	6	6	7	6
	여성	6	1	0	3	2
	남성	19	5	6	4	4

자료: 대구 수성구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 참고

달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정원은 32명이며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여성의원은 12-50%비율 범위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4개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의 여성의원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17> 대구 달서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합계	운영	기획행정	복지문화	경제도시
정원		32	8	8	8	8
전반기 원구성	현원	31	8	7	8	8
	여성	8	1	3	3	1
	남성	23	7	4	5	7

자료: 대구 달서구의회 내부자료, 홈페이지 참고

3) 의원 연구단체 현황

의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수요조사, 조례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 활동에 대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광역의회 3개, 기초의원 중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2개이며 중구, 동구, 남구는 1개 각각 운영하고 있다.

<표 III-18> 대구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현황

(2019.12 현재기준)

구분	현황	관련법규	비고
대구시	3개	대구광역시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정	제정: 2004.12.27 훈령 제 42호/ 일부개정: 2007.04.20 의회훈령 제 45호
중구	1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5
동구	1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3/ 개정: 2020. 2

서구	2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9. 3
남구	1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5
북구	2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정: 2011. 5/ 개정: 2019. 7
수성구	2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4/ 개정: 2020. 3
달서구	2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정: 2019. 11
달성군	2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 5

자료: 각 의회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분야 조례 제·개정 현황

대구 지방의회 제8대 전반기 원 구성 기간 동안(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여성가족분야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일생활균형기반 조성 정책영역과 관련되는 제·개정이 많았다. 그리고 건강과 복지증진,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정책영역과 관련된 조례들도 있었으며 대표 발의자는 여성의원이었다.

우선 광역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은 정책영역별로 일생활균형기반 조성 관련 6개, 건강과 복지증진 관련 3개, 평등하게 일할권리와 기회보장 관련 1개,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관련 3개였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 여성가족관련 조례들은 대부분 여성의원들이 대표발의하였다.

<표 III-19> 광역의회 여성가족분야 조례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소속	정책 영역분류	법규명	제개정일	대표발의자 성별
광역의회	건강과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2020.03.10	여성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05	여성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018.10.30	남성

일생활균형 기반조성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8.02.28	여성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2018.08.10	여성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8.08.10	여성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2019.07.10	여성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2019.08.12	남성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10	여성
평등하게 일할권리와 기회보장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11.18	여성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2019.02.28	여성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촉진에 관한 조례	2019.05.20	남성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0	여성

자료: 대구광역시의회홈페이지(<http://council.daegu.go.kr>), 의안검색

기초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도 정책영역별로 일생활 균형 기반 관련 조례가 대부분이었다. 8개 구군 의회에서 대부분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영유아보육지원조례」, 「한부모가족지원조례」 발의도 많았다. 기초의회에서도 여성가족의제 관련 조례들은 대부분 여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이 많았지만 광역의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성의원들의 대표 발의도 다수 나타났다.

<표 III-20> 기초의회 여성가족분야 조례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소속	정책 영역분류	법규명	제개정일	대표발의자성별
중구 의회	건강과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20	여성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10	여성
	일생활균형기반 조성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019.02.1	여성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	2019.10.10	여성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2019.11.11	여성

동구 의회	일생활균형기반 조성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2019.07.10	여성
서구 의회	건강과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2019.03.20	남성
	일생활균형기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2019.08.12	남성
남구 의회	건강과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2019.10.10	여성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10.10	여성
	일생활균형기반 조성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2019.10.10	여성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10	여성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19.10.10	남성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2019.05.20	여성
북구 의회	건강과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4.10	여성
	일생활균형기반 조성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2019.09.20	남성
수성구 의회	건강과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2018.12.10	여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	2019.05.30	남성
	일생활균형기반 조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03.18	남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2019.11.11	여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20	남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03.30	여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06.01	남성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19.12.20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19.04.01	여성
	달서구 의회	건강과 복지증진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2019.03.04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2019.07.11	남성
일생활균형기반 조성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2019.03.04	남성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2019.09.23	남성
일생활균형기반 조성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9.10.11	여성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2.21	남성	

	평등하게 일할권리와 기회보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19.11.21	여성
달성군의회	일생활균형기반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2019.12.30	남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2020.04.29	남성
	평등하게 일할권리와 기회보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020.06.01	남성
	건강과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4.29	남성

자료: 각 구군의회 홈페이지, 의안 및 회의록 검색

3.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분석

가. 분석방법 및 내용

대구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구군 의회 회의록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민선8기 지방의회 전반기(2018.6~2020.6) 동안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 회의록을 수집하였으며 의회별 생성문서는 2018년 하반기가 가장 많았다.

<표 III-21> 의회별 문서 생성량

구분		합계		(단위: 개)			
				2018 하반기	2019 상반기	2019 하반기	2020 상반기
전체		2,465	(100%)	852	511	661	441
분류	대구시의회	427	(17.3%)	160	71	130	66
	중구의회	177	(7.2%)	60	53	37	27
	동구의회	340	(13.8%)	117	73	87	63
	서구의회	179	(7.3%)	67	32	56	24
	남구의회	290	(11.8%)	92	71	59	68
	북구의회	374	(15.2%)	132	81	98	63
	수성구의회	239	(9.7%)	89	35	77	38
	달서구의회	290	(11.8%)	85	63	73	69
	달성군의회	149	(6.0%)	50	32	44	23

주: 생성문서 수량 = 의회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의 수량(각 회기별 * 위원회별 * 각 1-6회차)

수집된 자료는 전체 문서 내 주요 키워드 언급량(빈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 상위 키워드 순위 비교, 주요 키워드의 동시출현빈도, 수집 키워드의 문서 내 언급내용을 확인하여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를 분석하였다. 각 키워드 간 관계 속에서의 연관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통계프로그램 R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키워드는 여성가족의제와 관련된 6개 정책영역 14개 분야를 중심으로 120개를 선정하여 집계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위한 검색 키워드 선정은 양성평등기본계획 정책과제와 시구군 여성가족정책 분야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차 선정 후 문서 내 검색을 통해 필터링한 결과이다.

<표 III-22> 여성가족의제 영역별 검색키워드

영역 (A: 대분류)	세부영역 (B: 중분류)	구체적 내용(확장 검색 키워드) (C: 소분류)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5)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 미투운동, 스킨미투, 여성친화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고용격차 해소)	여성취업/일자리 (12)	경력단절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취업률, 여성고용,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여성취업 지원방안, 여성일자리, 여성고용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일가정양립확산)	돌봄/보육(28)	돌봄, 아이돌봄, 돌봄서비스, 노인돌봄, 다함께 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 어린이집, 아동양육비, 양육비, 자녀양육비, 자녀양육, 아동수당, 양육수당, 공동직장어린이집,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기숙사직장어린이집, 보육, 보육료, 보육교사, 보육지원, 영유아보육, 보육시설, 건강보육, 출산보육, 보육법, 보육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일가정양립(11)	가족친화적, 일생활균형문화 확산, 일생활가족, 가족친화, 가족사랑,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지원센터, 대체인력, 육아휴직, 맞벌이, 맞벌이부부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저출산(4)	저출산, 저출생, 저출산고령화, 마더박스
	안전한 사회환경(10)	안심환경, 여성안심, 불법촬영 점검, 불법촬영 예방, 불법촬영, 여성안전, 여성폭력, 여성혐오, 성범죄, 성범죄자, 여성범죄
	성/가정폭력(13)	아동학대, 아동보호, 성폭력, 성폭행, 성폭력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예방, 성폭력상담소,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가해자피해자치료회비, 폭력예방 교육,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5)	성매매피해,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집결지,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성별영향평가(3)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2)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
	성인지 예산(1)	성인지 예산
건강과 복지증진	이주민 /이주여성(12)	이주여성 인권보호, 이주여성 인권, 이주여성 보호, 이주여성, 탈북여성, 이주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여성(4)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노인, 중소여성장애인, 청년여성장애인
	한부모가정(6)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미혼모, 미혼모부
전체	6개 영역 14개 분야	116개 Keyword

나. 분석결과

1) 여성가족의제 관심분야: 상위키워드 분석

(1) 전체

대구 지방의회에서 관심도가 높은 여성가족의제는 일생활균형사회기반 조성과 관련된 영역이며 주로 저출산 및 돌봄보육과 관련한 내용에 관심도가 높았고 이주민/이주여성에 관한 이슈에도 관심이 높았다. 가장 관심이 부족한 영역은 여성일자리와 양성평등체계에 관한 의제였다.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전체 8,744개이며 영역별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이 6,318개(7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력 근절과 인권보호’ 1,034개(12.1%), ‘양성평등문화 확산’ 703개(8.0%), ‘건강과 복지증진’ 565개(6.4%) 순이었다.

영역별 세부영역 키워드와 이슈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에서는 돌봄/보육 5,011개로 돌봄보육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등에 관한 이슈, 저출산 745개, 일가정양립 562개로 육아휴직에 관한

이슈가 상위키워드로 나타났다. ‘폭력근절과 인권보호’는 성/가정폭력 779개로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관한 이슈, 안전한 사회환경 164개로 성범죄에 관한 이슈, 성매매피해 91개로 탈성매매에 관한 이슈가 상위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에서는 양성평등 703개로 양성평등 전반 및 여성친화에 관한 이슈가 상위키워드로 나타났다. ‘건강과 복지증진’은 이주민/이주여성 429개로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가 상위키워드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 125개, 장애여성 11개로 나타났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에서는 여성 취업/일자리 78개, ‘양성평등 정책추진기반 강화’에서는 성인지 교육 23개, 성인지 예산 12개, 성별영향평가 11개로 나타났다.

<표 III-23> 대구 지방의회 여성가족의제 영역별 상위 키워드

영역		세부영역	구체적 내용 (50개 이상 및 다수 키워드)
전체	8,774개 (100%)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일가정양립 확산)	6,318개 (72.0%)	돌봄/보육 (5,011개)	보육(1,674), 돌봄(1,353개), 어린이집(328개), 보육료(322개), 보육교사(242개), 양육수당(195개), 보육시설(159개), 국공립어린이집(119개), 다함께돌봄(97개), 양육비(90개), 영유아보육(85개), 보육비(84개), 자녀양육비(62개)
		저출산 (745개)	저출산(667개), 저출산고령화(58개)
		일가정양립 (562개)	육아휴직(338개), 맞벌이(112개), 일가정양립(63개)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1,034개 (11.7%)	성/가정폭력 (779개)	아동학대(185개), 성폭력(160개), 아동보호(126개), 가정폭력(120개), 성희롱(77개), 여성폭력(65개)
		안전한 사회환경 (164개)	성범죄(98개), 불법촬영(18개), 여성안전(18개), 여성안심(13개)
		성매매피해 (91개)	탈성매매(45개), 성매매피해자(28개)
양성평등 문화확산	703개 (8.0%)	양성평등 (703개)	양성평등(645개), 여성친화(42개), 스쿨미투(9개), 미투운동(6개)
건강과 복지증진	565개 (6.4%)	이주민/이주여성 (429개)	다문화가족(96개), 이주민(92개), 이주여성(83개), 다문화가정(6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8개), 탈북민(26개)
		한부모가정 (125개)	한부모가정(15개), 한부모가족(50개), 한부모가족지원법(17개)

		장애여성 (11개)	여성장애인(3개), 여성장애인노인(2개), 중소 여성장애인(4개), 청년여성장애인(2개)
평등하게 일 할권리와 기회보장	78개 (0.8%)	여성취업/일자리 (78개)	여성일자리(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16개), 경제활동참가율(11개), 경력단절여성(9개)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46개 (0.5%)	성별영향평가 (11개)	특정성별영향평가(3개), 성별영향평가법(3개), 성별영향평가(5개)
		성인지 교육 (23개)	성인지 교육(23개)
		성인지 예산 (12개)	성인지 예산(12개)

(2) 광역의회

광역의회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여성가족의제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과 관련된 영역이며 주로 돌봄보육과 관련한 내용에 관심도가 높았다. 그리고 폭력근절과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동과 관련된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특히 기초의회와는 달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불법촬영, 양성평등과 관련하여서는 미투운동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역의회는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가 총 1,984개 언급되고 있으며, 그 중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일가정 양립확산)’이 1,171개(59.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영역별 세부영역 키워드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일가정 양립확산)’ 영역에서는 돌봄/보육 727개로 보육, 돌봄이라는 직접적인 이슈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영역에서는 성/가정폭력 282개로 아동학대, 아동보호 등에 관한 이슈 키워드가 나타났다. ‘양성평등문화확산’ 영역에서는 양성평등 268개로 양성평등 일반, 스쿨미투에 관한 이슈 키워드가 나타났다. ‘건강과 복지증진’ 영역에서는 이주민/이주여성 110개로 다문화가족 및 가정, 이주여성에 관한 이슈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평등하게 일 할 권리와 기회보장’ 영역에서는 여성취업/일자리 41개로 여성일자리, 경제활동참가율에 관한 이슈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 강화’ 영역에서는 성인지 교육 10개로 성인지 교육과 관련한 이슈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표 III-24> 대구 광역의회 여성가족의제 영역별 상위 키워드

영역		세부영역	구체적 내용 (50개 이상 및 다수 키워드)
전체	1,984개 (100%)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일가정양립확산)	1,171개 (59.0%)	돌봄/보육 (727개)	보육(198개), 돌봄(297개), 어린이집(11개), 보육료(58개), 보육교사(39개), 양육수당(13개), 보육시설(7개), 자녀양육비(17개), 민간어린이집(16개), 출산보육(19개)
		저출산 (265개)	저출산(222개), 저출산고령화(34개)
		일가정양립 (179개)	육아휴직(84개), 맞벌이(18개), 일가정양립(52개), 일가정양립지원센터(8)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342개 (17.2%)	성/가정폭력 (282개)	아동학대(73개), 성폭력(25개), 아동보호(79개), 가정폭력(20개), 성희롱(24개), 폭력예방교육(11개)
		안전한 사회환경 (57개)	성범죄(21개), 여성폭력(38개), *불법촬영(12개)
		성매매피해 (3개)	성매매피해(3개)
양성평등 문화확산	282개 (14.2%)	양성평등 (282개)	양성평등(268개), *스쿨미투(9개)
건강과 복지증진	127개 (6.4%)	이주민/이주여성 (110개)	다문화가족(30개), 이주여성(25개), 다문화가정(34개)
		한부모가정 (17개)	한부모가정(5개), 한부모가족(12개)
		장애여성(0개)	-
평등하게 일 할 권리와 기회보장	41개 (2.0%)	여성취업/일자리 (41개)	여성일자리(13개), 경제활동참가율(11개)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21개 (1.0%)	성별영향평가 (4개)	특정성별영향평가(2개), 성별영향평가(2개)
		성인지 교육 (10개)	성인지 교육(8개)
		성인지 예산 (7개)	성인지 예산(7개)

주*: 광역의회에서 나타난 상위 검색 키워드(기초의회와 순위 다름)

(3)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와는 달리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관심이 영역별로 좀 더 구체적이었다. 대구 8개 기초의회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여성가족

의제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과 관련된 영역이며 주로 돌봄보육과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이었다. 폭력근절과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성폭력에 관한 이슈에 관심이 더 높았고 성매매피해와 관련된 이슈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여성친화, 건강과 복지증진영역에서 이주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기초의회는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가 총 6,788개 언급되고 있으며, 그 중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일가정 양립확산)’이 5,147개(75.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영역별 세부영역 키워드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일가정 양립확산)’영역에서 돌봄/보육 4,284개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료, 양육수당, 국공립어린이집, 보유교사 등에 관한 이슈 키워드가 나타났다. ‘폭력근절과 인권보호’영역에서 성/가정폭력 497개로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폭력에 대한 이슈 키워드가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환경 107개 성범죄, 여성안전에 대한 이슈 키워드, 성매매피해 88개로 탈성매매,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이슈 키워드도 나타났다. ‘양성평등문화확산’영역에서 양성평등 421개로 양성평등, 여성친화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다. ‘건강과 복지증진’영역에서 이주민/이주여성 319개로 다문화가족, 이주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다. ‘평등하게 일 할 권리와 기회보장’영역에서는 여성취업/일자리 37개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다.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 강화’영역에서는 성인지 교육 7개로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다.

<표 III-25> 대구 기초의회 여성가족의제 영역별 상위 키워드

영역		세부영역	구체적 내용 (50개 이상 및 다수 키워드)
전체	6,788개 (100%)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일가정양립확산)	5,147개 (75.8%)	돌봄/보육 (4,284개)	보육(1,476), 돌봄(1,056개), 어린이집(328개), 보육료(264개), 보육교사(203개), *양육수당(182개), 보육시설(152개), *국공립어린이집(118개), 다함께돌봄(96개), *양육비(88개), *영유아보육(81개), *보육비(7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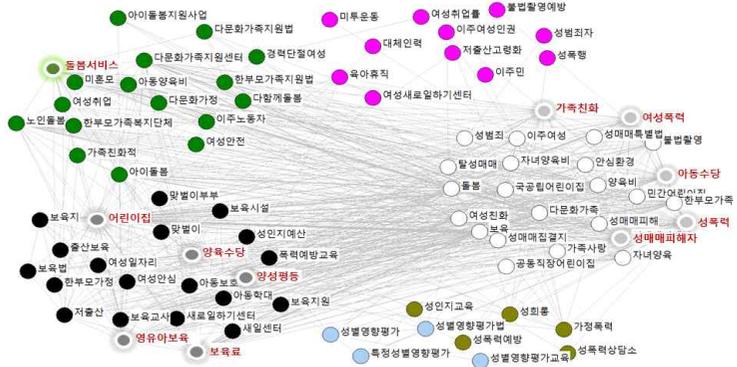
		저출산 (480개)	저출산(445개), 저출산고령화(24개), *마더박스(10개)
		일가정양립 (383개)	육아휴직(254개), 맞벌이(94개), *가족사랑(13개)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720개 (10.6%)	성/가정폭력 (497개)	아동학대(112개), 성폭력(135개), 아동보호(47개), 가정폭력(100개), 성희롱(53개), 여성폭력(23개)
		안전한사회환경 (107개)	성범죄(77개), *여성안전(11개)
		성매매피해 (88개)	*탈성매매(45개), *성매매피해자(28개)
양성평등 문화확산	421개 (6.2%)	양성평등 (421개)	양성평등(377개), *여성친화(42개)
건강과 복지증진	438개 (6.5%)	이주민/이주여성 (319개)	다문화가족(66개), 이주민(88개), 이주여성(58개), 다문화가정(2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8개), *탈북민(25개)
		한부모가정 (108개)	한부모가정(38개), *미혼모부(37개), *한부모가족지원법(17개)
		장애여성 (11개)	여성장애인(3개), 여성장애인노인(2개), <u>중소</u> 여성장애인(4개), 청년여성장애인(2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37개 (0.5%)	여성취업/일자리 (3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13개), *경력단절여성(9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25개 (0.4%)	성별영향평가 (7개)	성별영향평가(3개), 특정성별영향평가(1개), 성별영향평가법(3개)
		성인지 교육 (13개)	성인지 교육(13개)
		성인지 예산 (5개)	성인지 예산(5개)

주*: 기초의회에서 나타난 상위 검색 키워드(광역의회와 순위 다름)

구군별로 기초의회의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관심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구군별 위치, 인구, 산업 등 지역적 차이가 있고 각 기초단체가 주력하고 있는 여성가족분야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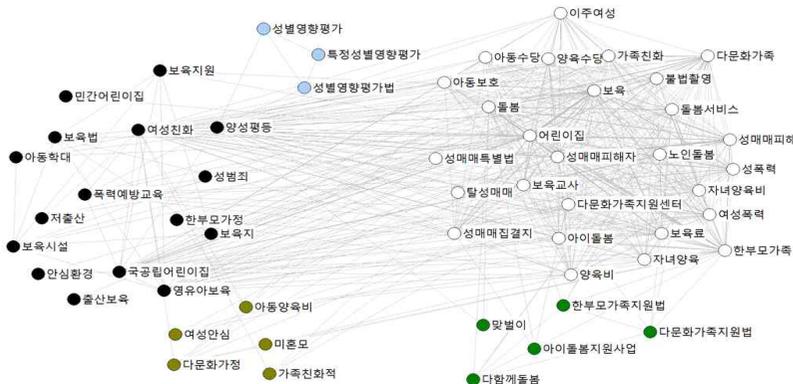
우선 전반적으로 중구의회(1,705개) 서구의회(1,488개), 수성구의회(1,614개)에서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일가정양립확산)’이 높았지만 세부영역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살펴보면 관심 있는 여성가족의제에 차이가 있었다. 중구는 돌봄/보육(913개), 양성평등(212개), 일가정양립(146개), 저출산(111개), 성매매피해(85개)를 중심으로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기초의회 전체 네트워크를 보면,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영역의 성/가정 폭력, 성매매피해 이슈와 ‘양성평등문화확산’ 영역의 양성평등 이슈 간의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나타났다. ‘건강과 복지증진(이주민/이주여성, 한부모 가정 등)’ 이슈들은 영역별로 공유되어 있었다. 반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여성 취업/일자리)’ 나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 강화(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등)’ 의 이슈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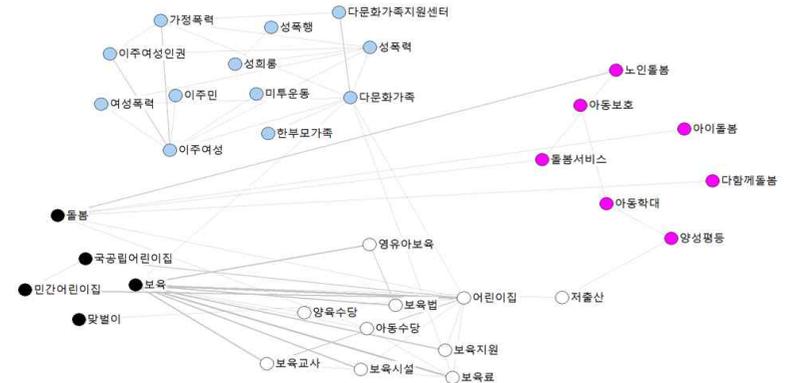
[그림 III-3] 기초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중구의회는 여성안전 분야가 강조되면서 성매매, 양육 지원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취업, 불법촬영, 혐오 등의 이슈 부분은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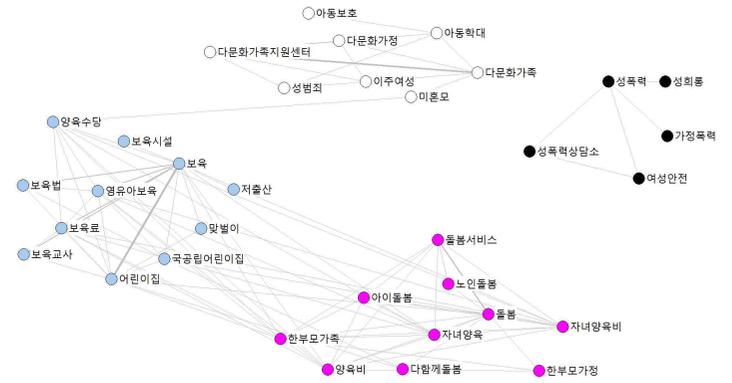
[그림 III-4] 중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동구의회는 이주여성의 폭력 문제와 보육지원, 돌봄서비스 등의 이슈가 나타났다. 특히 보육시설 지원 분야가 강조되었다. 반면 일자리 문제, 양성평등 이슈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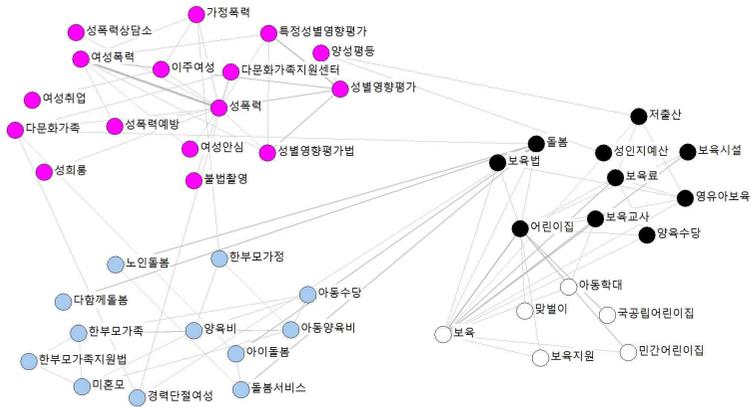
[그림 III-5] 동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서구의회는 보육시설, 돌봄, 다문화가정 지원 등이 이슈로 두드러졌다. 여성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타 이슈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자리 이슈는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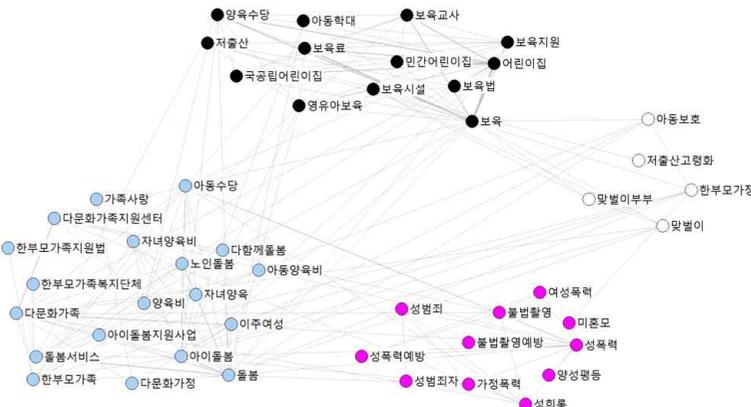
[그림 III-6] 서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남구의회는 여성폭력근절 및 인권 보호와 돌봄서비스 등이 일정부분 나타났다. 반면 일생활균형 사회기반과 양성평등 정책 부분의 연결은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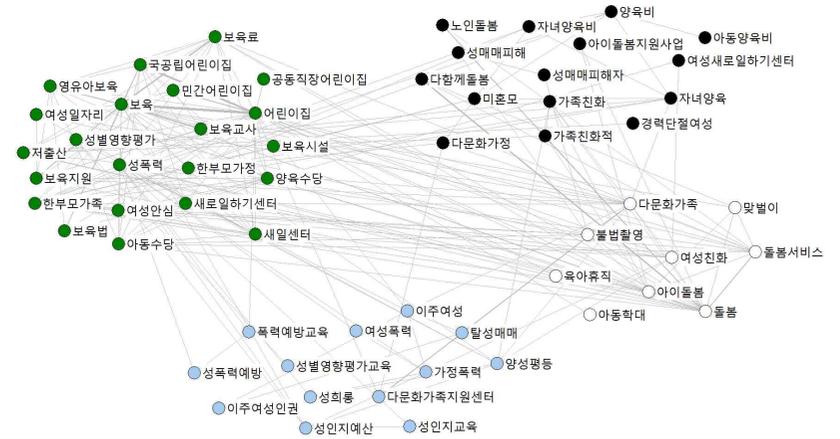
[그림 III-7] 동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북구의회는 타 기초단체에 비해 다양한 이슈가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및 사회적 약자의 양육지원활동, 안전 이슈, 보육시설 이슈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으며 반면 여성일자리 문제는 언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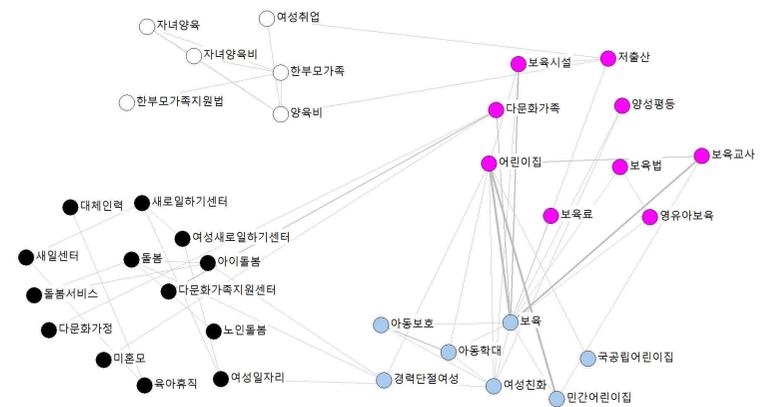
[그림 III-8] 북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수성구 의회는 보육 관련 어린이집, 양육수당 등의 이슈가 있으며, 돌봄 서비스, 경력단절여성 지원, 성폭력 예방정책 등의 이슈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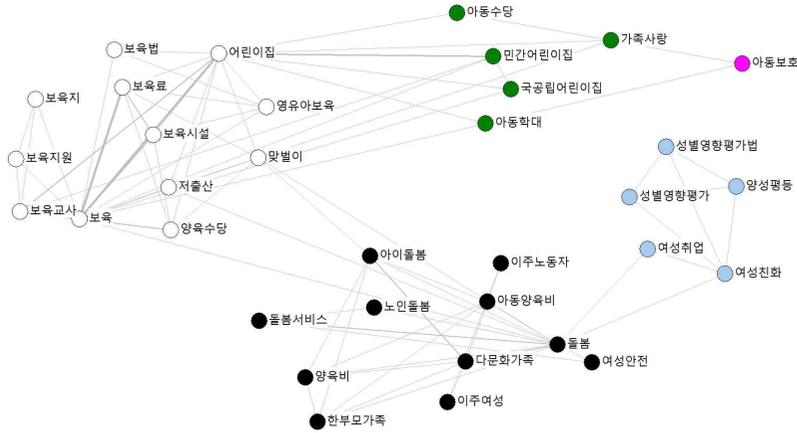
[그림 III-9] 수성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달서구의회는 다문화가정 및 돌봄서비스와 보육 정책 등이 일정부분 확인되었다. 반면 장애여성, 성폭력 대응 등의 이슈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III-10] 달서구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달성군의회는 교육 지원, 돌봄서비스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분야의 이슈와 여성 일자리 이슈는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11] 달성군의회 여성가족의제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

4. 소결

대구 지방의회는 전반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많은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등에서 여성의원의 참여 가능성은 높았다. 광역시의회에서 의장단은 전반기 여성의원이 역임을 하고 상임위원장도 6개 중 1개에서 여성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여서 여성의원이 장으로서 역할이 완전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의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기초의회도 광역의회의 상황과 유사했지만 상대적으로 의원 수가 적은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이 의장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의원수가 많은 기초의회를 보면 여성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으로서 역할은 부족하였다. 그리고 여성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위원회 성격은 의회 행정·운영분야인데 이는 대부분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제8대 대구 지방의회의원들이 상반기 원 구성 기간 동안 발의한 조례는 대부분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며 대표 발의자가 여성의원이 많았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대구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있는 정책과제와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이는 의원들이 여성가족관련 중앙정부 정책이 마련되거나 상위법 제정에 따라 현안문제로서 지역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대구 지방의회의원들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는 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며 돌봄·보육, 성·가정폭력 이슈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민과 이주여성,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우선적으로 높았다. 다만,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와는 달리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관심이 영역별로 좀 더 구체적이었는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연관해서 기초의회가 자치구별로 나타나고 있는 세부적인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대구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광역의회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여성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하여서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는 여전히 소관위원회에서 당해 발생하는 여성가족 이슈, 특히 취약계층과 관련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소관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성가족의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 소관위원들의 경우 관심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구 지방의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성가족의제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지역에서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영역별 이슈 인식을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한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평등하게 일할 기회 보장 제공 및 여성일자리, 양성평등문화 확산 관련 정책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으로 이러한 정책영역과 관련한 정책의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IV.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제고 및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53
2. 조사결과	54
3. 소결	73

1. 조사개요

여성가족의제는 대부분 성 주류화정책이나 양성평등정책으로 형성된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 관련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구 지방의회의원들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성인지 관점에서 의정활동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제8대 대구 지방의회의원 146명(광역의원 30명, 기초의원 11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 하여 온라인조사로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김경희 외(2011), 김원홍 외(2013)연구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여성가족의제 관련 의정활동 경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참여 정도, 성인지 감수성 정도, 성인지적 의정활동 필요성 등이다. 조사기간은 2020. 9.2-9.15(총15일)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유효응답은 총 105부이며 자료는 통계프로그램(SPSS VER. 20.0 for Window)으로 처리하였다.

<표 IV-1> 문항구성 내용

조사영역	세부내용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력, 소속의회, 소속위원회, 의원활동 전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여성가족정책 의정활동 경험	- 상임위원회 회의, 본회의 등에서 여성가족/성평등 의제 논의 정도 - 성인지 증진활동 경험 및 활동내용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참여경험 및 참여욕구	- 최근 2년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의식 제고 교육 참여(성희롱예방교육, 여성리더십 교육 제외) - 교육·워크숍 주관기관 - 교육·워크숍 참여 만족, 불만족 - 향후 의회가 주최하는 관련 교육·워크숍 참여의사
성인지적 의정활동 필요성 인식 및 정책요구	-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 정도 - 의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의식 등의 요인이 성인지적 의정 활동에 미치는 영향 - 성인지적 의정 활동 활성화 방안

응답의원 특성을 살펴보면, 소속의회는 광역의회 24.8%, 기초의회 75.2%였다. 성별로는 여성 31.4%, 남성 58.1%, 무응답 10.5%였으며 연령은 30대

이하 2.9%, 40대 19.0%, 50대 36.2%, 60대 이상 30.5%였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5.7%, 대졸 35.2%, 대학원졸 46.7%, 무응답 12.4%였다. 응답의원은 전반적으로 여성가족의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원활동 전 여성가족의제 관련 단체활동 경험이 있다 15.2%, 없다 84.8%였다. 그리고 소속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 소관 상임위원회 23.8%, 여성가족정책 소관이 아닌 상임위원회 50.5%였다.

<표 IV-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 체]	105	100.0	여성가족정책 소관 상임위원회	25	23.8		
소속 의회	광역의회	26	24.8	소속 위원회	여성가족정책 소관이 아닌 상임위원회	53	50.5
	기초의회	79	75.2		상임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음	20	19.0
성별	여성	33	31.4	의원활동 전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기타	9	8.6
	남성	61	58.1		있다	16	15.2
	무응답	11	10.5		없다	89	84.8
연령	30대 이하	3	2.9	학력	고졸이하	6	5.7
	40대	20	19.0		대졸	37	35.2
	50대	38	36.2		대학원졸	49	46.7
	60대 이상	32	30.5		무응답	13	12.4
	무응답	12	11.4				

2. 조사결과

가. 여성가족의제 의정활동 경험

1) 여성가족관련 의제를 다루고 있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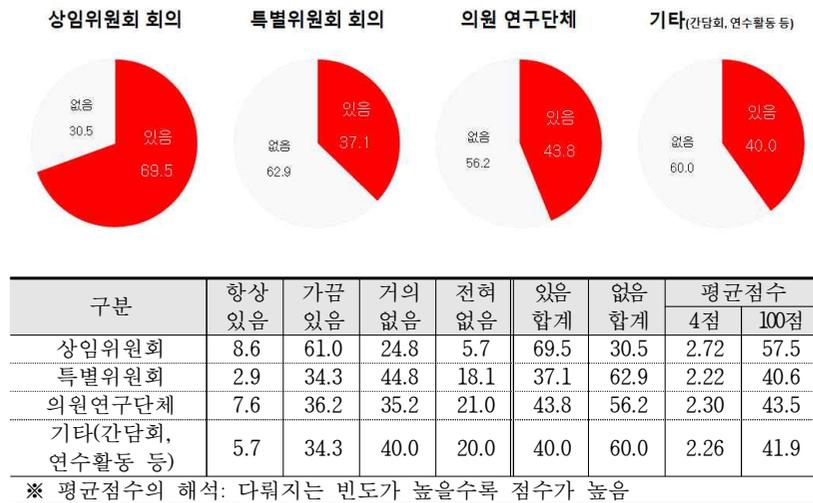
일가족양립정책, 여성의 대표성확대, 여성사회참여 활동, 성별영향평가 등 여성가족의제는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상임위원회 회의

에서 여성가족의제는 여성가족정책소관이면서 의원활동 전 여성가족관련 단체 활동경험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의원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가족의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여성가족의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는 응답은 상임위원회 69.5%, 특별위원회 37.1%, 의원연구단체 43.8%, 기타(간담회, 연수활동 등) 40.0%로 나타났다.

<표 IV-3> 소속위원회별 여성가족관련 의제 다루는 정도

(n=105, 단위: %, 점)



상임위원회에서 여성가족의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는 응답은 소속의 회별로 광역의회 69.2%, 기초의회 69.6% 이며 의원의 소속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소관 80.0%, 여성가족정책비소관 69.8%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원 활동 전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 87.5%, 없는 경우 66.3% 였으며 성별로 여성 75.8%, 남성 72.1%, 무응답 36.4%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30대 66.7%, 40대 80.0%, 50대 68.4%, 60대이상 75.0%, 무응답 41.7% 로 나타났다.

<표 IV-4> 응답자 특성별 상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관련 의제 다루는 정도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항상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있음	없음	평균점수	
								4점	100점
전체	(105)	8.6	61.0	24.8	5.7	69.5	30.5	2.72	57.5
소속의회	광역의회 (26)	7.7	61.5	26.9	3.8	69.2	30.8	2.73	57.7
	기초의회 (79)	8.9	60.8	24.1	6.3	69.6	30.4	2.72	57.4
소속 위원회	여성가족 정책 소관 (25)	20.0	60.0	20.0	0.0	80.0	20.0	3.00	66.7
	여성가족정책 비소관 (53)	5.7	64.2	30.2	0.0	69.8	30.2	2.75	58.5
	상임위원회 미구성 (20)	5.0	75.0	5.0	15.0	80.0	20.0	2.70	56.7
	기타 (9)	0.0	22.2	44.4	33.3	22.2	77.8	1.89	29.6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다 (16)	0.0	87.5	12.5	0.0	87.5	12.5	2.88	62.5
	없다 (89)	10.1	56.2	27.0	6.7	66.3	33.7	2.70	56.6
성별	여성 (33)	3.0	72.7	15.2	9.1	75.8	24.2	2.70	56.6
	남성 (61)	11.5	60.7	24.6	3.3	72.1	27.9	2.80	60.1
	무응답 (11)	9.1	27.3	54.5	9.1	36.4	63.6	2.36	45.5
연령	30대 (3)	33.3	33.3	33.3	0.0	66.7	33.3	3.00	66.7
	40대 (20)	5.0	75.0	20.0	0.0	80.0	20.0	2.85	61.7
	50대 (38)	5.3	63.2	26.3	5.3	68.4	31.6	2.68	56.1
	60대 이상 (32)	9.4	65.6	15.6	9.4	75.0	25.0	2.75	58.3
	무응답 (12)	16.7	25.0	50.0	8.3	41.7	58.3	2.50	50.0

2) 의정활동 시 양성평등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경험

의원 중 다수가 양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활동 경험은 성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연령별로 40대가 많았다. 그리고 주된 활동은 의원대상 성인지 위크숍 참석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양성평등정책예산 편성 요구와 각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참여할당 제안 등이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양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63.8%, 없다 36.2%로



[그림 IV-1] 양성평등인식 증진 활동 여부

나타났다.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소속의회가 광역의회 65.4%, 기초의회 63.3%이며 소속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 소관 60.0%, 비소관 66.0%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 여성 66.7%, 남성 67.2%였으며 연령별로 30대 66.7%, 40대 85.0%, 50대 68.4%, 60대 이상 53.1%로 나타났다.

<표 IV-5> 응답자 특성별 양성평등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경험

구분		사례수	(단위: 개, %)	
			있음	없음
전체		(105)	63.8	36.2
소속의회	광역의회	(26)	65.4	34.6
	기초의회	(79)	63.3	36.7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정책 소관	(25)	60.0	40.0
	여성가족정책 비소관	(53)	66.0	34.0
	상임위원회 미구성	(20)	65.0	35.0
	기타	(9)	44.4	55.6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다	(16)	68.8	31.3
	없다	(89)	62.9	37.1
성별	여성	(33)	66.7	33.3
	남성	(61)	67.2	32.8
	무응답	(11)	36.4	63.6
연령	30대	(3)	66.7	33.3
	40대	(20)	85.0	15.0
	50대	(38)	68.4	31.6
	60대 이상	(32)	53.1	46.9
	무응답	(12)	41.7	58.3

의원들의 양성평등 인식 증진 활동 유형은 ‘의원대상 성인지 워크숍 실시·참석’ 61.2%로 가장 많았으며 ‘양성평등정책예산 편성·증액요구’ 38.8%, ‘각 위원회 구성 시 여성참여할당 제안 및 요구’ 37.3%, ‘성별통계·양성평등관련 의정질의’ 22.4%, ‘양성평등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및 참여’ 2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양성평등 인식 증진 활동 유형

응답자 특별성로 전반적으로 ‘의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워크숍 실시/참석’ 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는데 소속의회가 광역의회 64.7%, 기초의회 60.0% 였으며 소속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 소관 46.7%, 비소관 68.6%로 나타났다. 의원활동 전 여성가족단체 경험이 있는 경우 72.7%, 없는 경우 58.9% 였으며 성별로 여성 63.6%, 남성 61.0%, 연령별로 40대 52.9%, 50대 80.8%, 60대이상 52.9%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 여성과 남성은 ‘의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워크숍 실시/참석’ 유형 외 다음 순위에서 차이가 났는데 여성은 ‘각 위원회 구성 시 여성참여 할당 제안 및 요구’ 50.0%, 남성은 ‘양성평등 정책예산 편성/증액 요구’ 46.3%로 나타났다.

<표 IV-6> 응답자 특성별 양성평등 인식 증진 활동 유형

구분		사례수	(단위: 개, %)								
			의원대상 성인지 워크숍 실시/참석	양성평등 정책 예산 편성/증액 요구	각 위원회 구성 시 여성참여할당 제안 및 요구	성별통계·양성평등관련 의정질의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참여	법안 (또는 조례) 제/개정	도서관(자료실)에 양성평등 관련 자료 신청 및 열람	성차별 가능성 있는 정책 예산 삭감 요구	기타
전체		(67)	61.2	38.8	37.3	22.4	20.9	16.4	7.5	4.5	3.0
소속의회	광역의회	(17)	64.7	35.3	29.4	29.4	23.5	17.6	11.8	0.0	0.0
	기초의회	(50)	60.0	40.0	40.0	20.0	20.0	16.0	6.0	6.0	4.0
소속위원회	여성가족 정책소관	(15)	46.7	33.3	40.0	33.3	13.3	26.7	0.0	6.7	0.0

	여성가족정책비서관	(35)	68.6	42.9	31.4	22.9	25.7	17.1	14.3	2.9	2.9
	상임위원회미구성	(13)	69.2	30.8	46.2	15.4	15.4	7.7	0.0	0.0	0.0
	기타	(4)	25.0	50.0	50.0	0.0	25.0	0.0	0.0	25.0	25.0
여성가족단체활동경험	있다	(11)	72.7	45.5	63.6	36.4	18.2	18.2	9.1	9.1	9.1
	없다	(56)	58.9	37.5	32.1	19.6	21.4	16.1	7.1	3.6	1.8
성별	여성	(22)	63.6	31.8	50.0	13.6	31.8	27.3	9.1	4.5	0.0
	남성	(41)	61.0	46.3	34.1	26.8	14.6	12.2	7.3	4.9	4.9
	무응답	(4)	50.0	0.0	0.0	25.0	25.0	0.0	0.0	0.0	0.0
연령	30대	(2)	0.0	50.0	0.0	0.0	50.0	50.0	0.0	50.0	0.0
	40대	(17)	52.9	35.3	35.3	29.4	11.8	29.4	17.6	0.0	11.8
	50대	(26)	80.8	38.5	46.2	23.1	26.9	7.7	0.0	7.7	0.0
	60대 이상	(17)	52.9	47.1	35.3	17.6	17.6	17.6	11.8	0.0	0.0
	무응답	(5)	40.0	20.0	20.0	20.0	0.0	0.0	0.0	0.0	0.0

※ 응답항목은 복수 선택 가능하였음

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참여 경험/육구

1) 교육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범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 외에 성인지 정책과 관련된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주관 기관이 주로 의회였으며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최근 3년간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여 경험에 대해 ‘없다’ 24.8%, ‘1회’ 29.5%, ‘2회’ 23.8%, ‘3회’ 11.4%, ‘4회 이상’ 10.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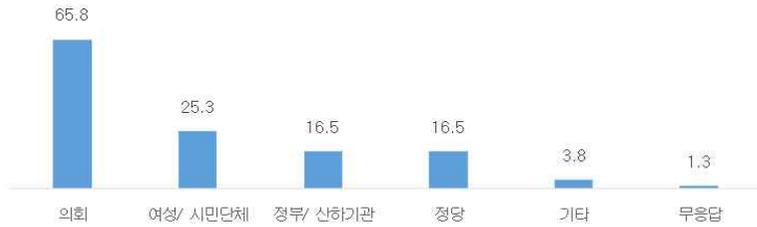
[그림 IV-3]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참여 경험

응답자 특성별로 소속의회가 광역의회는 ‘1회’가 38.9%로 가장 많았고 기초의회도 ‘1회’ 26.6%로 많았으나 참여경험이 ‘없다’ 24.1%로 1회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속위원회별로 여성가족정책 소관은 ‘1회’ 32.0%로 가장 많았으나 여성가족정책 비서관일 경우 ‘없다’ 26.4%로 더 많이 응답되었다. 의원활동 전 여성가족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는 경우 ‘4회 이상’ 31.3%, 없는 경우 ‘1회’ 33.7%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 ‘없다’ 27.3%, 남성 ‘1회’ 29.5%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40대 ‘1회’ 35%, 50대 ‘2회’ 31.6%, 60대 이상은 ‘없다’ 와 ‘1회’ 각각 28.1%로 나타났다.

<표 IV-7> 응답자 특성별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관련 교육·워크숍 참여 경험

		구분	사례수	없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소속의회	전체	(105)	24.8	29.5	23.8	11.4	10.5	
	광역의회	(26)	26.9	38.5	19.2	7.7	7.7	
	기초의회	(79)	24.1	26.6	25.3	12.7	11.4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정책 소관	(25)	16.0	32.0	32.0	12.0	8.0	
	여성가족정책 비서관	(53)	26.4	24.5	22.6	9.4	17.0	
	상임위원회 미구성	(20)	40.0	35.0	10.0	15.0	0.0	
	기타	(9)	22.2	33.3	33.3	11.1	0.0	
여성가족관련단체활동경험	있다	(16)	25.0	6.3	25.0	12.5	31.3	
	없다	(89)	24.7	33.7	23.6	11.2	6.7	
성별	여성	(33)	27.3	21.2	21.2	12.1	18.2	
	남성	(61)	24.6	29.5	26.2	11.5	8.2	
	무응답	(11)	18.2	54.5	18.2	9.1	0.0	
연령	30대	(3)	66.7	0.0	0.0	0.0	33.3	
	40대	(20)	30.0	35.0	20.0	5.0	10.0	
	50대	(38)	18.4	23.7	31.6	13.2	13.2	
	60대 이상	(32)	28.1	28.1	21.9	12.5	9.4	
	무응답	(12)	16.7	50.0	16.7	16.7	0.0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주관 기관은 ‘의회’ 65.8%, ‘여성·시민단체’ 25.3%, ‘정부·산하기관 및 정당’ 16.5%, ‘기타’ 3.8%로 나타났다.



[그림 IV-4]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참여 주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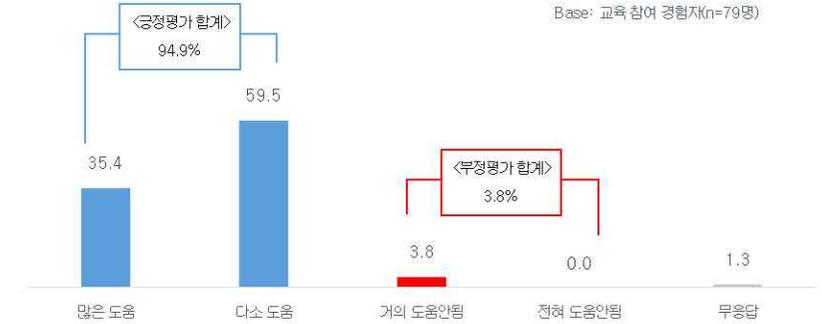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로 전반적으로 ‘의회’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소속 의회가 광역의회 73.7%, 기초의회 63.3%이며 소속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 소관 61.9%, 여성가족정책 비소관 71.8%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전 여성가족 관련 단체 경험이 있는 경우 66.7%, 없는 경우 65.7%이며 성별로 여성 66.7%, 남성 67.4%, 연령별로 40대 57.1%, 50대 77.4%, 60대 이상 60.9%로 나타났다.

<표 IV-8> 응답자 특성별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참여 주관 기관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의회	여성/ 시민단체	정부/ 산하기관	정당	기타	무응답	
전체	(79)	65.8	25.3	16.5	16.5	3.8	1.3	
소속의회	광역의회	(19)	73.7	31.6	10.5	5.3	0.0	0.0
	기초의회	(60)	63.3	23.3	18.3	20.0	5.0	1.7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정책 소관	(21)	61.9	14.3	19.0	14.3	4.8	4.8
	여성가족정책 비소관	(39)	71.8	38.5	15.4	10.3	5.1	0.0
	상임위원회 미구성	(12)	50.0	16.7	25.0	33.3	0.0	0.0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다	(12)	66.7	33.3	25.0	25.0	0.0	8.3
	없다	(67)	65.7	23.9	14.9	14.9	4.5	0.0
성별	여성	(24)	66.7	33.3	25.0	16.7	4.2	0.0
	남성	(46)	67.4	21.7	10.9	19.6	4.3	0.0
	무응답	(9)	55.6	22.2	22.2	0.0	0.0	11.1
연령	30대	(1)	100.0	0.0	0.0	100.0	0.0	0.0
	40대	(14)	57.1	21.4	21.4	50.0	7.1	0.0
	50대	(31)	77.4	25.8	12.9	12.9	3.2	0.0
	60대 이상	(23)	60.9	26.1	13.0	4.3	4.3	0.0
	무응답	(10)	50.0	30.0	30.0	0.0	0.0	10.0

※ 응답항목은 복수 선택 가능하였음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성평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는데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 94.9%, ‘도움이 되지 않았다’ 3.8%로 나타났다.



[그림 IV-5] 교육/ 워크숍 성평등 의정활동 도움 정도

응답자 특성별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는 응답이 많았다. 소속 의회가 광역의회 94.9%, 기초의회 94.7%였으며 소속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 소관 95.2%, 여성가족정책 비소관 97.4%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전 여성가족 단체관련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 91.7%, 없는 경우 95.5%였으며 성별로 여성 91.7%, 남성 97.8%, 연령별로 40대 100%, 50대 96.8%, 60대 이상 91.3%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활동 도움여부를 평균점(100점 환산기준)으로 봤을 때, 소속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소관(81.7점)이며 여성가족관련 단체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84.8점) 그리고 연령이 40대(83.3점)와 50대(81.7점)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응답자 특성별 교육/ 워크숍 성 평등 의정활동 도움 정도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많은 도움이	다소 도움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무응답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평균		
								4점	100점	
전체	(79)	35.4	59.5	3.8	1.3	94.9	3.8	3.32	77.4	
소속의회	광역의회	(19)	36.8	57.9	5.3	0.0	94.7	5.3	3.32	77.2
	기초의회	(60)	35.0	60.0	3.3	1.7	95.0	3.3	3.32	77.4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정책 소관	(21)	42.9	52.4	0.0	4.8	95.2	0.0	3.45	81.7
	여성가족정책 비소관	(39)	25.6	71.8	2.6	0.0	97.4	2.6	3.23	74.4
	상임위원회 미구성	(12)	58.3	33.3	8.3	0.0	91.7	8.3	3.50	83.3
	기타	(7)	28.6	57.1	14.3	0.0	85.7	14.3	3.14	71.4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다	(12)	50.0	41.7	0.0	8.3	91.7	0.0	3.55	84.8
	없다	(67)	32.8	62.7	4.5	0.0	95.5	4.5	3.28	76.1
성별	여성	(24)	41.7	50.0	8.3	0.0	91.7	8.3	3.33	77.8
	남성	(46)	37.0	60.9	2.2	0.0	97.8	2.2	3.35	78.3
	무응답	(9)	11.1	77.8	0.0	11.1	88.9	0.0	3.13	70.8
연령	30대	(1)	0.0	100.0	0.0	0.0	100.0	0.0	3.00	66.7
	40대	(14)	50.0	50.0	0.0	0.0	100.0	0.0	3.50	83.3
	50대	(31)	48.4	48.4	3.2	0.0	96.8	3.2	3.45	81.7
	60대이상	(23)	21.7	69.6	8.7	0.0	91.3	8.7	3.13	71.0
	무응답	(10)	10.0	80.0	0.0	10.0	90.0	0.0	3.11	70.4

2) 의회 주관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워크숍 개최 참여 의사

의원들은 의회 주관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에 관한 교육·워크숍을 개최를 할 경우 참여 의사가 높았다. 그리고 광역의회, 여성가족정책소관, 여성가족관련 단체활동경험이 있는 경우, 여성, 40~50대가 상대적으로 참여의사가 더 높았다.

참여의사에 대해 ‘있다’ 85.7%, ‘없다’ 13.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전반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다’ 응답이 많았으며 소속의회가 광역의회 92.3%, 기초의회 83.5%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속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 소관 84.0%, 여성가족정책 비소관 90.6%이며 의원활동 전 여성가족관련단체 활동 경험에 있는 경우 93.8%, 없는 경우 84.3%, 성별로 여성 93.9%, 남성 56.9%, 연령별로 40대 90.0%, 50대 92.1%, 60대이상 87.5%로 나타났다.



[그림 IV-6] 의회 주관 교육/ 워크숍 참여 의사

<표 IV-10> 응답자 특성별 의회주관 교육/워크숍 참여의사

(단위: 개, %)

응답자 전체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105)	85.7	13.3	1.0
소속의회	광역의회	(26)	92.3	7.7	0.0
	기초의회	(79)	83.5	15.2	1.3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정책 소관	(25)	84.0	12.0	4.0
	여성가족정책 비소관	(53)	90.6	9.4	0.0
	상임위원회 미구성	(20)	75.0	25.0	0.0
	기타	(9)	88.9	11.1	0.0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다	(16)	93.8	0.0	6.3
	없다	(89)	84.3	15.7	0.0
성별	여성	(33)	93.9	6.1	0.0
	남성	(61)	86.9	13.1	0.0
	무응답	(11)	54.5	36.4	9.1
연령	30대	(3)	66.7	33.3	0.0
	40대	(20)	90.0	10.0	0.0
	50대	(38)	92.1	7.9	0.0
	60대 이상	(32)	87.5	12.5	0.0
	무응답	(12)	58.3	33.3	8.3

다. 성인지적 의정활동 필요성 인식 및 정책요구

1) 영역별 성인지 감수성

응답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일과 성역할 분리 인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였다. 특히 일·가정 양립 상황에서 여성의 자녀돌봄, 여성 집중직종에 남성의 참여 문제에 있어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각 세부분항 평균점수(100점 환산기준)는 ‘가정과 성역할 분리 인식’ 37.3점, ‘성 역할 위계 인식’ 26.0점, ‘일과 성역할 분리 인식’은 46.8점으로 나타났다.

<표 IV-11> 항목별 성인지 감수성 정도

(단위: 점, %)

구분	비동의	동의	무응답	평균점수	
				4점	100점
가정과 성역할 분리 인식	66.7	32.4	1.0	2.12	37.3
성역할 위계 인식	54.5	43.6	1.9	1.78	26.0
일과 성역할 분리 인식	50.5	45.7	3.8	2.40	46.8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해석 함

가정과 성역할 분리 인식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각 항목에 대해서 평균점수(100점 환산기준)는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34.3점,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39.1점,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35.6점,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34.0점,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 43.6점이었다.

<표 IV-12> 가정과 성역할 분리 인식

(단위: 점, %)

구분	비동의	동의	평균점수	
			4점	100점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68.6	30.5	2.03	34.3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65.7	33.3	2.17	39.1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69.5	29.5	2.07	35.6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73.3	25.7	2.02	34.0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	56.2	42.9	2.31	43.6

※ 평균점수의 해석: 항목에 대해 동의할수록 점수가 높음

응답자 특성별로 영역 세부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광역의회, 여성가족 정책비서관, 여성가족관련단체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 남성, 60대 이상에서 가정과 성역할 분리인식이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 는 문항에 대해 여성 44.4점, 남성 39.3점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원은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가정과 성역할 분리인식이 약하였다.

<표 IV-13> 응답자특성별 가정과 성역할 분리인식

(단위: 평균100점기준, 점.)

응답자 특성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	
전체	34.3	39.1	35.6	34.0	43.6	
소속의회	광역시의회	32.1	43.6	44.9	33.3	48.7
	기초의회	35.0	37.6	32.5	34.2	41.9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정책 소관	22.2	33.3	31.9	27.8	37.5
	여성가족정책 비서관	38.4	39.0	33.3	30.2	45.9
	상임위원회 미구성	35.0	40.0	38.3	38.3	45.0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다	26.7	22.2	15.6	22.2	44.4
	없다	35.6	41.9	39.0	36.0	43.4
성별	여성	29.3	27.3	28.3	27.3	44.4
	남성	36.6	42.6	35.5	35.0	39.3
	무응답	36.7	56.7	60.0	50.0	66.7
연령	30대	33.3	22.2	0.0	0.0	11.1
	40대	28.3	35.0	25.0	25.0	33.3
	50대	37.7	35.1	29.8	32.5	44.7
	60대 이상	32.3	42.7	44.8	38.5	44.8
	무응답	39.4	54.5	57.6	51.5	63.6

성역할 위계 인식에서는 남성성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각 항목에 대해서 평균점수(100점 환산기준)는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19.1점,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25.9점,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32.7점,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26.9점,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25.2점 이었다.

<표 IV-14> 성역할 위계 인식

(단위: 점, %)

구분	비동의	동의	평균점수	
			4점	100점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86.7	11.4	1.57	19.1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84.8	13.3	1.78	25.9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74.3	23.8	1.98	32.7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16.2	81.9	1.81	26.9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10.5	87.6	1.76	25.2

※ 평균점수의 해석: 항목에 대해 동의할수록 점수가 높음
* 역코딩 결과임

응답자 특성별로 영역 세부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없는 경우, 남성, 60대 이상에서 성역할 위계 인식이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광역의회 20.0점, 여성가족정책 비서관 17.0점,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기초의회 26.1점,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기초의회 33.8점, 여성가족정책소관 36.2점,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광역의회 28.0점, 여성가족정책 비서관 27.0점,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기초의회 27.8점으로 상대적으로 소속의회와 소속위원회에 따라 성역할 위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응답자 특성별 성역할 위계 인식

(단위: 평균100점기준, 점.)

응답자 특성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소속의회	광역의회	20.0	25.3	29.3	28.0	17.3
	기초의회	18.8	26.1	33.8	26.5	27.8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정책 소관	11.6	23.2	36.2	17.4	23.2
	여성가족정책 비서관	17.0	23.9	30.2	27.7	23.3
	상임위원회 미구성	33.3	30.0	35.0	30.0	30.0
	기타	14.8	29.6	33.3	33.3	29.6
여성가족관련단체활동경험	있다	8.9	20.0	28.9	8.9	17.8
	없다	20.8	26.9	33.3	29.9	26.5
성별	여성	10.1	21.2	21.2	22.2	18.2
	남성	22.4	25.7	37.2	29.0	27.3
	무응답	29.6	44.4	44.4	29.6	37.0
연령	30대	0.0	11.1	22.2	11.1	0.0
	40대	6.7	18.3	16.7	23.3	16.7
	50대	18.4	24.6	33.3	22.8	23.7
	60대 이상	25.0	28.1	39.6	33.3	31.2
	무응답	33.3	43.3	43.3	33.3	36.7

일과 성역할 분리 인식에서는 남성의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 직업에 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여진다. 각 항목에 대해서 평균점수(100점 환산기준)는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59.1점,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64.7점,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16.5점이었다.

<표 IV-16> 일과 성역할 분리인식

(단위: 점, %)

구분	비동의	동의	평균점수	
			4점	100점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35.2	61.0	2.77	59.1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28.6	67.6	2.94	64.7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87.6	8.6	1.50	16.5

※ 평균점수의 해석: 항목에 대해 동의할수록 점수가 높음

응답자 특성별로 영역 세부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초의회, 여성가족정책소관, 여성가족관련단체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여성,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일에 대한 성역할 인식이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17> 응답자특성별 일과 성역할 분리인식

(단위: 평균100점기준, 점.)

응답자 특성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체	59.1	64.7	16.5	
소속의회	광역시의회	54.7	58.7	14.7
	기초의회	60.5	66.7	17.1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정책 소관	69.7	77.3	10.6
	여성가족정책 비소관	57.9	62.9	15.7
	상임위원회 미구성	54.4	63.2	19.3
	기타	59.3	55.6	25.9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다	66.7	88.1	2.4
	없다	57.9	60.9	18.8
성별	여성	67.7	73.7	7.1
	남성	56.8	62.8	20.2
	무응답	38.1	38.1	28.6
연령	30대	88.9	88.9	0.0
	40대	66.7	71.7	8.3
	50대	64.9	69.3	14.9
	60대 이상	49.0	58.3	20.8
	무응답	41.7	41.7	33.3

2) 성인지적 의정활동의 영향요인 및 필요한 제도

의원들은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의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의식’ 이라고 생각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서 평균 점수(100점 환산기준)는 ‘의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의식’ 56.7점, ‘의회 운영에 관한 양성평등한 법/제도’ 49.7점, ‘소속 정당의지지’ 46.7점, ‘여성 의원들의지지’ 49.0점, ‘지역구 주민의지지’ 47.7점, ‘시민 단체나 이익집단의 지지’ 46.7점이었다.

<표 IV-18>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단위: 점, %)

구분	전혀 영향 없음	다소 적은 영향	다소 많은 영향	매우 많은 영향	무응답	평균점수	
						4점	100점
의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의식	10.5	26.7	39.0	19.0	4.8	2.70	56.7
의회 운영에 관한 양성평등한 법/제도	11.4	39.0	31.4	13.3	4.8	2.49	49.7
소속 정당의 지지	17.1	34.3	32.4	11.4	4.8	2.40	46.7
여성의원들의 지지	9.5	37.1	42.9	5.7	4.8	2.47	49.0
지역구 주민의 지지	12.	37.1	38.1	7.6	4.8	2.43	47.7
시민 단체나 이익집단의 지지	12.4	39.0	37.1	6.7	4.8	2.40	46.7

※ 평균점수 해석: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할수록 점수가 높음
* 역코딩 결과임

응답자 특성별로 영역 세부문항에 대해 ‘의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의식’ 은 여성가족정책소관(68.2점), 여성가족 관련 단체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69.0점), 남성(61.2점), 40대(71.7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운영에 관한 양성평등한 법/제도’ 는 광역시의회(54.2점), 여성가족정책소관(56.1점), 여성가족관련 단체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64.3점), 남성(50.8점), 40대(56.7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소속정당의 지지’ 는 기초의회(47.8점), 여성가족정책 비소관(48.1점), 여성가족관련단체 활동 경험 있는 경우(52.4점), 여성(52.5점), 30대(66.7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여성의원들의 지지’ 는 기초의회(49.1점), 여성가족정책소관(51.5점), 여성가족관련 단체활동경험 있는 경우(66.7점), 남성(50.8점), 40대(53.3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구 주민의지지’ 는 광역의회(52.8점), 여성가족정책비소관(50.0점), 남성(49.7점), 50대(50.9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지지’ 는 광역의회 (54.2점), 여성가족정책소관(50.0점), 여성가족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는 경우(54.8점), 남성(47.0점), 40대(48.3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표 IV-19> 응답자특성별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단위: 평균100점기준, 점.)

응답자 특성	의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의식	의회 운영에 관한 양성평등한 법/제도	소속 정당의 지지	여성의원들의 지지	지역구 주민의 지지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지지	
							전체
소속의회	광역의회	52.8	54.2	43.1	48.6	52.8	54.2
	기초의회	57.9	48.2	47.8	49.1	46.1	44.3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정책 소관	68.2	56.1	45.5	51.5	39.4	50.0
	여성가족정책 비소관	55.1	50.0	48.1	50.0	50.0	48.7
	상임위원회 미구성	50.9	43.9	45.6	43.9	52.6	42.1
	기타	55.6	44.4	44.4	44.4	37.0	37.0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다	69.0	64.3	52.4	66.7	47.6	54.8
	없다	54.7	47.3	45.7	46.1	47.7	45.3
성별	여성	51.5	48.5	52.5	45.5	44.4	44.4
	남성	61.2	50.8	44.8	50.8	49.7	47.0
	무응답	38.9	44.4	33.3	50.0	44.4	55.6
연령	30대	55.6	55.6	66.7	44.4	33.3	55.6
	40대	71.7	56.7	50.0	53.3	43.3	48.3
	50대	57.9	54.4	51.8	50.0	50.9	44.7
	60대 이상	50.0	40.6	39.6	45.8	50.0	46.9
	무응답	38.1	42.9	33.3	47.6	38.1	47.6

의원들은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회의 법/제도의 성인지적 의정활동’ 과 ‘의원 대상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이라고 생각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서 평균점수(100점 환산기준)는 ‘의회의 법/제도의 성인지적 의정활동’ 74.7점, ‘의원 대상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74.1점, ‘의회 직원대상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71.4점, ‘양성평등을 위한 의정 모니터링단 운영’ 67.7점, ‘지역여성가족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71.8점이었다.

<표 IV-20> 성인지적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필요 없음	필요함	평균점수	
			4점	100점
의회의 법/제도의 성인지적 의정활동 (예: 연구모임 등)	8.6	85.7	3.23	74.7
의원 대상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9.5	84.8	3.22	74.1
의회 직원대상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13.3	81.0	3.14	71.4
양성평등을 위한 의정 모니터링단 운영	21.0	73.3	3.03	67.7
지역여성가족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11.4	81.9	3.15	71.8

※ 평균점수의 해석: 항목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록 점수가 높음

응답자 특성별로 영역 세부문항에 대해 필요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필요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의회의 법/제도의 성인지적 의정활동’ 은 기초의회(75.9점), 여성가족정책소관(84.1점),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는 경우(88.1점), 여성(77.8점), 40대(83.3점)에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대상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은 기초의회(74.6점), 여성가족정책소관(76.2점),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는 경우(85.7점), 여성(74.7점), 30대(88.9점)에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직원대상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은 광역의회(69.6점), 여성가족정책소관(74.6점),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78.6점), 남성(69.4점), 30대(77.8점)에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을 위한 의정 모니터링단 운영’ 은 광역의회(69.6점), 여성가족정책소관 (74.6점),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78.6점), 남성(69.4점), 30대(88.9점)에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여성가족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는 기초의회(72.4점), 여성가족정책소관(76.2점), 여성가족 관련 단체 활동경험 있는 경우(85.7점), 30대(77.8점)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응답자특성별 성인지적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평균100점기준, 점.)

응답자 특성		의회의 법/제도의 성인지적 의정활동	의원 대상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의회 직원대상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양성평등을 위한 의정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여성가 족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전체		74.7	74.1	71.4	67.7	71.8
소속의회	광역의회	71.0	72.5	71.0	69.6	69.6
	기초의회	75.9	74.6	71.5	67.1	72.4
소속 위원회	여성가족정책 소관	84.1	76.2	71.4	74.6	76.2
	여성가족정책 비소관	71.2	73.1	71.2	64.1	68.6
	상임위원회 미구성	77.2	71.9	75.4	70.2	77.2
	기타	70.4	81.5	66.7	66.7	70.4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경험	있다	88.1	85.7	85.7	78.6	85.7
	없다	72.5	72.2	69.0	65.9	69.4
성별	여성	77.8	74.7	73.7	66.7	72.7
	남성	73.8	74.3	71.0	69.4	72.7
	무응답	66.7	66.7	60.0	53.3	50.0
연령	30대	77.8	88.9	77.8	88.9	77.8
	40대	83.3	78.3	75.0	68.3	76.7
	50대	76.3	78.1	72.8	67.5	72.8
	60대 이상	69.8	67.7	69.8	67.7	70.8
	무응답	61.1	61.1	55.6	55.6	46.7

3. 소결

대구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여성가족의제는 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의원연구단체나 간담회 연수회 활동 등에서도 다루어지지만 활동 성격에 따라 반드시 다루어지는 않았다. 그리고 양성평등 증진 활동은 대부분 의원대상 성인지 워크숍 참석이며 양성평등 정책예산 요구나 위원회 구성 시 여성참여 할당 제안 등의 활동도 하였다.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전반적으로 1회 이상 받은 의원들이 많았으며 주로 의회에서 이루어진 교육이었고 대부분 관련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향후 의원에서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에서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높았다. 의원들은 성인지

적 의정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의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의식’ 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회의 법/제도의 성인지적 의정활동’ 과 ‘의원 대상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이었다. 한편, 의원들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고정관념이 크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돌봄에 대해서는 여성역할, 여성 집중직종에 남성 진출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정관념이 강한 편으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대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성가족의제를 다루고 있어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여성가족정책의 질의응답이외에 일상에서 여성가족의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의 참여가 높은 의회 내에서의 교육이나 워크숍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원이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위한 콘텐츠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원들의 가정, 일 등 영역별로 성 역할고정 관념을 개선하여 의정활동 시에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선입견이 작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위원의 비율이 여전히 낮지만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모든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한 의회 구축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의원이 주관하는 정기적인 교육과 성과제도 등을 마련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인지적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모임과 같은 의회의 법·제도적 장치 및 비공식 모임 등을 활용한 지원과 교육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정책방안

- | | |
|------------|----|
| 1. 연구결과 논의 | 77 |
| 2. 정책방안 | 79 |

1. 연구결과 논의

지방의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통제, 주민의 대표자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회 구성원인 의원이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관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지적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가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 지방의회에 여성참여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일생활 균형사회기반 정책영역 관련 조례 제·개정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여성의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광역의회보다 기초의회가 높았다. 하지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에는 여성의원이 선출되는 경향이어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전가능성이 보였다. 대구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주로 많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였지만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여성의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성가족의제에 관심이 의원 성별보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상관없이 여성가족의제 노출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상위법 제정 등과 관련된 여성가족 정책영역 조례 제·개정이 다수였는데 지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여성가족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의제를 이해 및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대구 여성가족의제에 이슈는 전반적으로 문화·복지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언급되었다. 대구 지방의회의원은 여성가족관련 문제 중 주로 돌봄/보육, 성/가정폭력, 저출산, 양성평등에 관해 관심이 높았다.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책영역에서는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과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부분이였다. 그리고 여성가족의제 중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이나 평등하게 일할 기회 보장 제공 및 여성일자리 등의 정책영역 이슈와 관련해서는 관심도가 매우 낮았다. 의원들의 여성가족의제 이슈에 대한 관심은 대구시의 여성가족정책 사업과제 수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의회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는 대구시의 여성가족정책 사업과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구시 여성가족정책은 시민의 요구나 인지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여성가족정책이 실행되어져야하며 행정기관에 미쳐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정책에서 대해서는 지방의회로부터 관심도를 높여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대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여성가족의제를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의원들은 여성가족의제 소관위원회 외에는 의원연구단체, 연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서도 논의한다고 하였는데 주로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참석을 통한 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선호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정책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에서 전문성이 있는 활동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 형태 중에 워크숍이나 교육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에 교육·워크숍 형태를 통한 성인지적 의정활동 역량강화가 확대되어져야한다. 그리고 교육·워크숍 외에 다양한 형태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과 성인지 예산편성/증액 요구 등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대구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과 성역할 분리’에 대해서 ‘성역할 위계 인식’이나 ‘가정과 성역할 분리인식’ 보다는 고정관념이 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였다. 특히 자녀돌봄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업에 여성이 진출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 등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의식 제고를 통한 성인지적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구 지방의회의원들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제고 및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여성가족의제 관심도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관심도가 높은 여성가족의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향후 지방의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관위원회 소속에 상관없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여성가족정책 영역별로 워크숍 형태의 성인지적 의정활동이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워크숍 수행 시 전문

성을 갖추고 있는 여성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참여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 지방의회라는 연구대상 범위와 기간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서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및 확대를 위한 성인지적 의회의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연구를 통해서 대구 지방의회의원들의 여성참여현황, 여성가족관련 주요 관심주제, 성인지 관점에서 의정활동 등 현황을 살펴본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2. 정책방안

가. 성인지 관점의 여성가족정책 의원 연구단체 활동 추진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성가족의제를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여성가족의제는 현재 대구시 및 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의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의제를 다루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2019.12기준) 대구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의원 연구단체는 1~2개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시청이나 구군청의 현안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일반 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의원연구모임 다수였다.

성인지 관점의 여성가족정책 의원 연구단체 활동은 성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에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의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배움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서울 도봉구의회와 대구 수성구의회 경우 ‘성인지 관점의 여성정책’ 모임을 여성의원들이 중심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단체는 성 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활성화를 위한 조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강의 및 교육 등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단체 모임이 광역의회와 타 기초의회로 확산되고 의회 간의 교류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의원들의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성인지 관점의 여성가족정책 의원 연구단체 결성을 통한 활동은 전문가와 함께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조례 개정 사례 검토, 정책영역별 관련 조례분석 및 1인 1조례 제·개정안 발표, 여성가족정책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등이다.

나. 다양한 형태의 지방의회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확대

지방의회에서는 모든 정책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소관부서를 벗어나 모든 의원이 여성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의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지방의회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교육 참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참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따라서 의회가 주도적으로 의무사항인 4대 폭력예방교육 외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성주류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여성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인지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운영조례에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명문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 평등 기본 조례(제2316호, 2019. 7.10)」를 제정하여 제11조에 도의회의 성인지 교육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 제11조(도의회의 성인지교육) ① 도의회 의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도의회 공직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도의회 의장은 성인지 교육을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의원들의 성인지 교육에서는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의정활동 정책영역별로, 의회조직 등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및 강사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교육·워크숍 운영 시에 여성 정책전문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의원대상 역량강화교육이나 워크숍 외에 연찬회, 조찬회 등의 모임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성인지 관점의 정책사례 등을 소개하는 교육도 의원들에게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 젠더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를 통한 여성가족의제 발굴 및 정책연계 강화

지방의회의원들은 지역민의 삶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의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알려지지 않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이나 관련단체 등의 참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그래서 시민, 여성단체, 전문가 등이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가족의제 설정과 성인지 관점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면 시민들의 이해도와 수용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조례가 대부분 상위법이나 중앙정부차원의 정책과 유사한데 지역의 여성가족정책은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많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정책으로 잘 실현되고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여성가족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연계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정책요구를 듣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설명회, 포럼 및 세

미나 등 참여 과정 후 조례 발의 및 제정 등을 통한 정책과제 실행이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인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 여성가족정책 관련 소관위원회 주최 세미나 및 소모임 개최

지방의회의 여성가족정책 관련 소관위원회 주최로 좌담회 형식의 세미나 혹은 소모임 개최를 통해 시민들과 성 평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모임을 통해서 소관위원회 뿐만 아니라 비 소관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여성가족의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노출빈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 평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청년단체,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그룹별 좌담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에서 지방의회와 연대를 통한 여성가족관련 공동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참고문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의원의 역할」. 서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김경희 (2010). 글로벌시대의 성별영향평가 어디까지 왔나? 「젠더리뷰」, 18:82-84.
- 김경희 · 김둘순 · 최유진 · 남궁윤영 · 고은정 · 김양희 · 박기남 (201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V).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희 · 김둘순 · 최유진 · 남궁윤영 · 고은정 · 김양희 · 박기남 (201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4),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김원홍 (2011).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변화 분석 및 국회 내 성주류화 강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 · 김복태 · Aie-Rie Lee (2013). 「19대 국회의원 여성의제 및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김원홍 · 양경숙 · 정형욱 (2009).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 · 양경숙 · 정형욱 (2010).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 · 김혜영 · 전선영 · 김원홍 (2017). 「2018년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주 (2015). 성 평등 국회의 의미와 현황.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1-15
- 김진화 · 홍선영 (2006). 「양성평등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 김혜영 (2011). 지방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남녀 지방의원의 역할인식. 「自治議政」 14(4): 20-30.
- 박숙자 · 김혜숙 (1999). 여성정책에 관한 남녀 국회의원의 관심 및 기여도 비교 분석 : 제15대 국회 1년간 회의록을 중심으로. 「議政研究」 韓國議會發展研究會, 8: 194-218.
- 오정은 (2009).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인식차에 관한 연구. 「여성정책논집」 9: 29-67.

- 이승기(2002).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관한 연구, 「충북개발연구」, 13(1):41-62
- 이혜숙 (2014).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과 성평등 의식 : 경남지역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0(1): 113-172.
- 임혜경 (2018).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강화 방안연구: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수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차인순 (2008). 성인지(性認知)의회를 위한 제18대 국회의 과제. 「의정논총」 3(1): 111-137.
- 최선영 (2015). 19대 국회의 양성평등 정책의 입법과정과 특징.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17-2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구여성가족재단 (2017). 대구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의정 활동 성과 및 장애요인 분석을 위한 간담회 자료
- 한국정치학회 (2018).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부평가」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Inter-Parliamentary Union (2008). Equality in Politics: A Survey of Women and Men in Parliaments. IPU

<인터넷자료>

- 대구광역시남구의회 <http://nam.daegu.kr>
-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https://www.dalseocouncil.daegu.kr>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https://council.dalseong.go.kr>
- 대구광역시동구의회 <http://www.donggucl.daegu.kr>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https://bukgucouncil.daegu.kr>
- 대구광역시서구의회 <https://www.dgscouncil.go.kr>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https://suseongcouncil.suseong.kr>
- 대구광역시의회 <https://council.daegu.go.kr>
- 대구광역시중구의회 <http://www.junggucouncil.daegu.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 <http://info.nec.go.kr/>
- IPU. www.ipu.org <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

부 부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대구 지방의회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20년 「대구 지방의회의원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및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대구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의정활동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입니다.

성인지적 의정활동이란 의회의 고유권한과 역할인 입법 활동 및 행정부 감사, 예·결산심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려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 관련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성인지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자치단체가 관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지역사회 양성평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답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시어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9

연구기관: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I 소속의회 및 의원경력

1. 소속의회	① 광역시의회 ② 기초의회(시·군·자치구)
2. 소속정당 (보기는 국회의석순배열)	① 더불어민주당 ② 미래통합당 ③ 정의당 ④ 국민의당 ⑤ 열린민주당 ⑥ 그 외 정당
3. 소속위원회 (복수응답 가능)	① 여성가족정책 소관 상임위원회 ② 여성가족정책 소관이 아닌 상임위원회 ③ 상임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음 ④ 기타()
4. 의원활동 전 여성가족 관련단체 활동 경험	① 있다(단체명:) ② 없다
5. 의원활동 경력	① 초선 ② 2선 ③ 3선 ④ 4선 ⑤ 5선 이상
6. 의원직 형태 및 지역구	① 선출직 1) 동구 2) 서구 3) 남구 4) 북구 5) 중구 6) 수성구 7) 달서구 8) 달성군 ② 비례대표직
7. 현재 의회 직책	① 의장단(의장, 부의장) ② 상임위 위원장 ③ 상임위 부위원장 ④ 상임위원

II 여성가족정책 의정활동 경험

문1. 소속된 의회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사회참여 활동, 성별영향평가 등 여성가족관련 의제가 얼마나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까?

구분	항상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1) 상임위원회 회의	①	②	③	④
2) 특별위원회 회의	①	②	③	④
3) 의원연구단체	①	②	③	④
4) 기타()	①	②	③	④

문2. 귀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3으로 가십시오)

문 2-1) (문 2에서 ‘① 있다’를 선택하신 경우)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성별통계·양성평등 관련 의정질의
- ② 법안(또는 조례) 제·개정
- ③ 각 위원회 구성 시 여성참여 할당 제안 및 요구
- ④ 의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워크숍 실시·참석
- ⑤ 성차별 가능성 있는 정책 예산삭감 요구
- ⑥ 양성평등 정책예산 편성·증액 요구
- ⑦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참여
- ⑧ 도서관(자료실)에 양성평등 관련 자료 신청 및 열람
- ⑨ 기타()

III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참여경험 및 참여욕구

문3. 귀하는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에 관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4대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여성 리더십 교육 제외)

- ① 없다 (☞ 문6으로 가십시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문4. (문 3에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워크숍 주관기관은 어디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의회 ② 정부·산하기관 ③ 정당 ④ 여성·시민단체
- ⑤ 기타()

문5. (문 3에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워크숍이 성평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 ①, ②의 경우 문6으로 가십시오)
- ③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④의 경우 문5-1로 가십시오)

문5-1) (문 5에서 ‘③,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신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시간이 너무 짧았다 ② 교육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
- ③ 의회활동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 ④ 성평등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했다 ⑤ 기타()

문6. 귀하는 의회가 독자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에 관한 교육·워크숍을 개최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4대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여성 리더십 교육 제외)

- ① 있다 ② 없다

IV 성인지적 의정활동 필요성 인식 및 정책요구

문7.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7-1) 가정과 성역할 분리 인식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①	②	③	④
2)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5)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7-2) 성역할 위계 인식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2) 남녀(이성)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4)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5)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7-3) 일과 성역할 분리 인식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문8.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해 다음의 요인들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영향 없음	다소 적은 영향	다소 많은 영향	매우 많은 영향
1) 의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의식	①	②	③	④
2) 의회운영에 관한 양성평등한 법·제도	①	②	③	④

3) 소속정당의 지지	①	②	③	④
4) 여성의원들의 지지	①	②	③	④
5) 지역구 주민의 지지	①	②	③	④
6)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지지	①	②	③	④

문9. 성인지적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각 항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필요 없음	거의 필요 없음	약간 필요	매우 필요
1) 의회의 법·제도의 성인지적 의정활동 (예: 연구모임 등)	①	②	③	④
2) 의원대상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①	②	③	④
3) 의회 직원대상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①	②	③	④
4) 양성평등을 위한 의정 모니터링단 운영	①	②	③	④
5) 지역 여성가족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①	②	③	④

♣ 응답자 일반 사항

성명	()
소속의회명	()
연락처	()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령	만()세
최종학력	① 고졸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졸(또는 제학, 휴학)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 여성정책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본과제 2020-08

대구 지방의회의원 여성가족의제 관심도 및 확대방안

2020년 11월 26일 인쇄

2020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 정 일 선

발행처 : (재)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41 (1층)

TEL. 053.219.9970 FAX. 053.219.9970

인쇄처 : 초록뱀디지털

TEL. 053.852.7842 FAX. 053.852.7843

ISBN : 978-89-97062-52-2 (93300)

<비매품>

이 보고서의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